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5년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전국비상시국회의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5년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전국비상시국회의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CONTENTS

개회사 문 국 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 2

환영사 이 한 주 민주연구원 원장 4

좌 장 신 형 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장

발 제 한국 사회 대전환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의 7

김 귀 옥 교수(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촛불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5

이 창 희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토 론 정 해 구 초빙교수(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57

서 복 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65

윤 영 상 교수(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73

박 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83

부 록 91

개 회 사



문 국 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

이 땅에서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의 보루였다고 높이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대학교 캠퍼스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무리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사태가 지속 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각 대학의 학생들과 동문, 그리고 교수들은 긴급행동에 나서 극우 세력의 난입을 저지하고 있다. 어느 대학교의 집회에서 교수가 발언한 내용이 가슴에 다가온다.

“민주주의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무지·무도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그 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다. 이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광장에서 펼쳐진 국민적 저력이 가져온 결과이다. 계엄 선포가 가져온 국격 추락에 자부심이 손상된 국민들이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다.

2017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들은 꿈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또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장의 열기를 지속시켜 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좌표가 될 사회대전환 의제들을 가다듬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도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광장의 열기를 높이는 데 함께 하면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저희는 광장에서 울려 나오는 열망을 준거삼아 공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차 사업 부터는 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세 내용이 제공될 것이다.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요한 의제와 관련한 숙의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게 될 것이다.

공론장을 활성화시킬 사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뜨겁게 만나고, 희망의 불꽃을 피우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민족자존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야 할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성취하는 길에도 저희 공론화 사업과 동행하기를 요청 드린다.

2025년 3월 1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 **문국주**

환영사



이 한 주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이한주입니다.

우선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전국비상시국회의 문국주 운영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그리고 혼란스런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국회의원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사회와 광장 등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민주시민들의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경제개혁·민생·부동산, 외교·안보·평화, 혐오·차별·성평등, 노동·일자리, 기후·환경, 교육 등 대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들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제도 개정과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추진해야 할 의제들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사회대개혁 의제들이 시민들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추진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참여하고 스스로의 삶을 직접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건강한 정치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열린 소통으로 집단지성을 이끌어내 하나씩 해결해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합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변화의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모두가 역사와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감한 행보를 전개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의제들과 함께 기후·인구위기, 디지털전환 등 사회변화에 발맞춘 전환 로드맵 그리고 의제 이행을 담보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깊이 있는 통찰과 분석으로 발제를 맡아 주신 김귀옥 교수님, 이창희 교수님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정해구 교수님, 서복경 박사님, 윤영상 교수님, 박혁 연구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대개혁 전환을 위한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개혁입법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민주연구원 원장 이한주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발 제

한국 사회 대전환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합의

김 귀 옥 교수

(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한국 사회 대전환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의

김 귀 옥 교수(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순 서〉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는 말: 왜 한국 사회 대전환인가? 2. 이번 조사의 특성과 의의 3. 조사 개요 4. 조사 결과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의견 2) 3순위 영역별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과제 3) 3순위 외 영역의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대전환 과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교육 영역과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개혁 과제 5) 보건·의료·안전 외 사회개혁 과제 5. 맺음말: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찰,
꾸준한 실천으로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자 <p>[부록1: 설문지]</p> <p>[부록2: 사회대전환을 위한 자유 의견 리스트]</p> |
|---|--|

1. 여는 말: 왜 한국 사회 대전환인가?

2024년 12월 3일 한밤, 윤석열(약칭 윤) 내란 사건은 거의 핵폭탄급 충격(Yoon's Impact)을 던졌다. 윤의 충격은 정치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거시 사회의 모든 부문에 충격을 미쳤다. 심지어 윤의 충격은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불문하고 대다수 국내외 한국 시민을 분노와 흥분, 불면과 불안, 혐오로 몰아넣어 과잉감정사회로 만들고 있다. 또한 윤의 충격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 금액을 3개월로 잡아 숫자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최소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박세열, 2025).

윤의 충격은 한국의 정치사회를 넘어 시민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원래 다원주의적 정당이 있는 대부분의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때로는 그러한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해젤

(Hegel, 2017)은 시민사회를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욕망이 들끓는 공간으로 보았듯이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정치 민주화 이래로 다양하고, 때로는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의 관점과 욕망, 정책과 비전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세기 민주화 이전 집시법상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던 반공과 태극기를 앞세운 관제성 집회와 달리, 대 정부 및 경제계 포함 지배집단에 대한 체제 저항운동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김대중 정부 출범 이래로 남남갈등이 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농민, 민중,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좌우의 날개를 단 한국 사회는 비상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남남갈등에서 소위 ‘혁신’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에는 때로는 일촉즉발의 위기도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시위 방식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보·혁 세력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테러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아,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성숙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도 한국 사회는 세계적 탈냉전시계가 잘 작동되지는 않았다. 냉전시대 동서진영을 가로질러 작동되었던 칼 슈미트의 우리 편 대 적의 적대적 세계관(Carl Schmitt, 2010[1922])은 2000년대 한국 사회에도 종종 작용했다. 보수정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이나 집단을 관리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미 증거가 나타나 2023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블랙리스트에 의해 피해를 본 배우·방송인 36명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윤수현, 2023). 또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혁 세력들과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래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공식 무대에서 자신과 정치적 처지가 다른 세력, 그것도 국회의원들을 직접 ‘반국가세력’이라 부른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1987년 6공 헌법이 공포·시행된 이래로 국가폭력으로서의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해의 명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여기는 상식이 자리 잡혀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한국 사회를 헌정주의 세력(pro-constitutionalists) 대 반헌정주의 세력(anti-constitutionalists)으로 뚜렷하게 분열시켰다. 헌정주의 세력들은 비상계엄령을 위헌성과 불법성에 의한 사실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한다면, 반헌정주의 세력들은 비상계엄령을 ‘고도의 통치 행위’¹⁾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질서를 교란하고, 이미 ‘근거 없

* 이번 조사는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회(위원장: 신형식)가 주관하고 기획하였다. 발표자는 이번 설문지를 작성하고 발표문을 집필하였으나, 이 글은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입장이 아니라, 김귀옥 개인 연구자의 견해를 밝히려 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707명의 새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조사에 협력해준

음’으로 결론이 난 부정선거탓, 야당탓, 실체도 불확실한 중국탓을 하고 있다. 건실한 주장과 합리성에 바탕에 둔 사회라면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현실 판단과 대안의 좌우 주장은 때로는 팽팽하면서도 한 사회의 균형을 잡아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반헌정주의 세력은 허위정보(소위 가짜뉴스, fake news; disinformation)²⁾를 교과서로 삼아 집회와 시위를 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과격과 테러가 돈/수익과 비례하는 폭동을 ‘국민저항권’이나 “자유민주항쟁”이라고 불렀던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 10분부터 6시 8분경까지의 ‘서부지법폭동’ 사건은 만인을 경악시켰다. 특히 구속된 66명의 과반수가 2030청년이라고 했다(서부원, 2025).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건전한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내란이 내전으로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커다란 상처와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지만, 설령 근본적 해결책을 성급하게 찾기는 어렵더라도 헌정적 수준에서 치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립하는 출발선은 87체제가 낳은 제6공화국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될 것이다. 6공 헌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되어 최소 수준일지라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수용하였다. 한 예로 2017년 3월 10일,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정질서의 수호가 낳은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40년이 다가오는 6공 헌법은 탄생 이래로 많은 도전을 받아 왔고, 대통령제를 비롯한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21세기에 걸맞은 통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를 둘러싼 요구들도 많고, 법조계 관련 검수완박, 검수원복 등을 둘러싼 갈등, 최근 내란사건과 관련된 계엄령 문제 등을 포함하여 개헌적 논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돌아보면

‘(주)서베이박스’와 ‘공론넷(주)’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1) 2024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고도의 정치/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1997년 확정된 대법원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판결을 둘러싼 판례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시킨 주장이었다. 즉 대법원 판결문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따라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당시의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기능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판결되었다(오준호, 2024). 윤상현의 왜곡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반헌정주의 세력들은 앵무새처럼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장혜원, 2025; 신웅수, 2025).
- 2) 가짜뉴스는 1기 트럼프 정치학에서 보았듯이 정치적 반대자를 불신하고 공격하고, 자신 편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Johan Farkas·Jannick Schou, 2018). 한국의 최근 연구에서도 적대적 매체 지각이 강하고 이념적 성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띠었다(김은정·유홍식, 2020).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헌 시도가 실패했던 데에는 국회의석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전문가들이나 일부 시민들의 주장은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또한 최근 내란 상황에서 개헌 논의의 성급성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헌정 회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개헌 자체가 아니다. 개헌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1987년 6공 헌법의 진부함과 객관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1987년 터져 나온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조속하게 식히기 위하여 여야가 최소주의로 합의한 6공 헌법 자체의 한계와 함께 전지구화시대 속 미·중 간의 갈등과 남북 분단과 냉전의 부정합적 상황의 지속, 세계적 초저출생·고령사회라는 인구학적 변화의 광범위한 영향,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기후환경의 정치경제학,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헌법은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대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 밀려왔다. 시민사회의 사회대전환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 이번 조사의 특성과 의의

이에 한국 시민들은 사회대전환의 필요성이나 구체적 내용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나가기 위하여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회는 시민사회 의식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일반시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선은 1970, 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에 앞장서왔던 학생회와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2014년 11월 1일, 전국 59개 대학 민주동문회가 결성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약칭 전민동)’(류경완, 2014)³⁾의 도움으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였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전민동 구성원들이 포함되지만, 그들에 의해 과거 학생운동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10대 후반으로부터 30대의 청년들도 꽤 참여하게 되었다.⁴⁾ 그래도 이번 조사는 전민동의 다수가 참가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정리해보도록 한다.

3) 전민동은 1990년 ‘전국대학민주동문회대표자협의회’로 결성되어 몇 차례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 민주화의 성과 달성으로 활동이 미약하게 되면서 해산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하의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문제를 경유하면서 재결성이 되었다(류경완, 2014). 2014년 당시 59개 대학이 시작하여 2025년 현재 가입 민동은 82개 민동, 대학으로는 79개 대학이라고 한다. 또한 회원 명부 상으로 회원은 2만 4천여명이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은 대략 8,000여명, 총회나 모임 참석 등 열성회원은 대략 1,600여명이라고 한다. 신형식 증언(2025/02/28 서면 면담)

4) 아쉽게도 전민동 여부를 묻는 조사 문항이 없어서 정확하게 전민동 구성원이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알 수 없다.

첫째, 전민동은 21세기 한국의 시민사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전민동은 노년세대로부터 청년세대를 아우른다. 60, 70대가 대학 다니던 1970, 80년대 초·중반 청년들의 대학진학율이 25~30% 내외였으나, 2000년대가 되면 청년의 대학진학율은 80% 내외(대한민국정책브리핑 편집부, 2008)로 바뀐에 따라 한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 졸업생을 갖춘 고학력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었다. 과거 소위 ‘학생운동권’으로 호명된 1970, 80년대 대학생들은 미래의 엘리트층으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 대학생은 엘리트라기보다는 시민층으로 인식되고, 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뿌린 내린 이래로 청년 대학생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고학력의 지식기반사회의 역설이다. 따라서 전민동을 대표하는 학생운동권은 소수 엘리트층도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시민사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민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식조사는 고학력 지식기반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학생운동권=진보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편견이기 쉽다. 흔히 청(소)년세대에 형성된 사회의식은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되기도 한다. 독일의 역사학자 딜타이(W. Dilthey)같은 사람은 하나의 세대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에 어떤 큰 사건을 만나 그 사건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았고, 여러 가지 개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전체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종원·김영인, 2009). 그러나 동일한 시대의 유사한 연령층이라 할지라도 같은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1970, 80년대 대학생으로서의 문화적 경험을 했던 사람이 20~30%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생이라도 계급이나 성별, 지역별 출신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했음을 실제로 목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1970, 80년대 대학생들 한 덩어리 세대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라는 역대급 경제난이 미친 영향력은 사회불평등 문제를 악화시켰고, 1970, 80년대 세대들 역시 계급차에 따른 사회불평등 문제를 경험했다. 따라서 과거 학생운동권 그룹을 한 덩어리로 말하는 것은 ‘사이비 과학 같은 위험성’(신진욱, 2024)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전민동과 그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일반 사회를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만도 않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조사에 설계 과정에서 전민동을 모집단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표집한 것은 아니므로 전민동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민동과 일반시민, 청년세대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폭에 대해서 발견할 기회가 될 것이다.

3.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웹 설문지[부록1: 설문지 참고 바람]⁵⁾ 형태로 실시되었고, 최종 응답자는 707명이다. 설문지는 총 78문항(주관식 1문항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빈도 조사와 교차분류표 작성은 ‘공론넷(주)(대표이사 공정호)’에서 맡아 진행했다. 설문지 문항 중 4문항은 응답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이고, 그 결과는 다음과 표1과 같다.

〈표 1〉 응답자 기본 인적 사항

구분	세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성별	남	437	62
	여	270	38
연령별	10대~30대	90	13
	40대~50대	307	43
	60대 이상	310	44
최종학력	고졸~대재	72	10
	대학 졸업	372	53
	대학원 이상	263	37
거주지	서울 및 수도권	451	64
	영남권	67	10
	호남권	84	12
	충청/강원/제주/해외	105	16
합계		707	100

이번 조사에는 남성 62%, 여성 38%가 참여하여 여성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은 아쉽다. 다만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⁶⁾ 발표 이전까지 대학생의 성비는 7:3 ~ 6:4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1990년대까지 현실을 반영하는 표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44%, 40~50대 43%여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다소 참여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10~30대의 응답률 13%는 대단히 낮지만, 전민동의 성격과 관련지어 볼 때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종학력별의 경우, 대학 졸업자 비율이 53%인 반면 대학원 이상[석·박사 과정 및

5) 설문지의 웹 버전은 ‘(주) 서베이박스’가 제작했음을 밝혀둡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6)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박남기·임수진, 2015) 발표와 함께 대학정원 자율화 및 대학설립의 개방성이 부여되면서 대학진학률이 80%가 넘게 되면서 대중대학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대학 학부제 실시로 인해 학생 조직과 학생운동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강명숙, 2021).

수로 포함]이 37%를 차지하는 것은 한국 전체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5%인 것을 고려할 때 학생운동 출신자 중에 상위 학교 진학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이번 조사 응답자 중에 과표집되었을 가능성⁷⁾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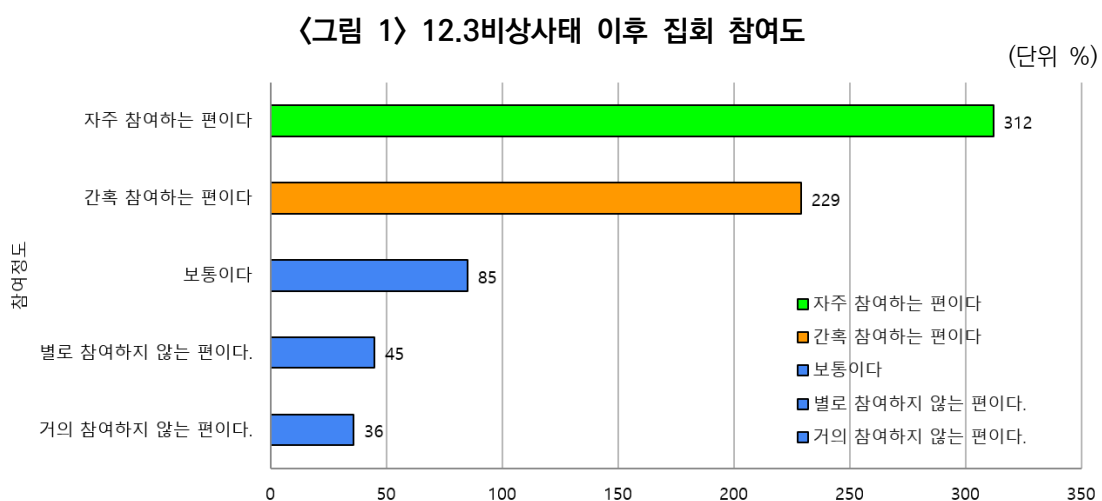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 거주지를 권역별로 재구성해서 보면, 서울/수도권 64%, 호남권 12%, 영남 10%, 충청/강원/제주/해외는 16%로 분류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인구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수도권 50.2%, 영남권 24.8%, 호남권 9.8%, 충청/강원/제주 15.2%로 분포(국토교통부, 2022)되어 있어서 수도권이 다소 과표집된 반면 영남권이 저표집되었다. 호남권과 충청//강원/제주/해외 응답자의 경우 현실과 근접하게 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로 조사 결과와 필요시 성별과 연령별 변수에 따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조사 결과 분석

1)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의견

응답자들의 12.3 비상사태 이후 개최되는 각종 집회 참여도를 질문했다. 응답자 707명 중 자주 참여한다 312명(44.1%), 간혹 참여한다 229명(32.4%)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 참여자는 75.5%가 12.3비상사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과표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200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발주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 참여자 조사의 응답자 중에는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16.1%(김귀옥·윤충로, 2007)였던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질문을 성별로 보면, 자주 참여와 간혹 참여라고 답을 하여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층은 남성이다. 연령별로 보면 자주 참여한다고 47.2% 응답을 한 연령대는 40~50대이고, 60대 이상이 42.6%, 10~30대가 38.9%로 순이다.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에는 10~30대가 다른 두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12.3계업 이후 집회 참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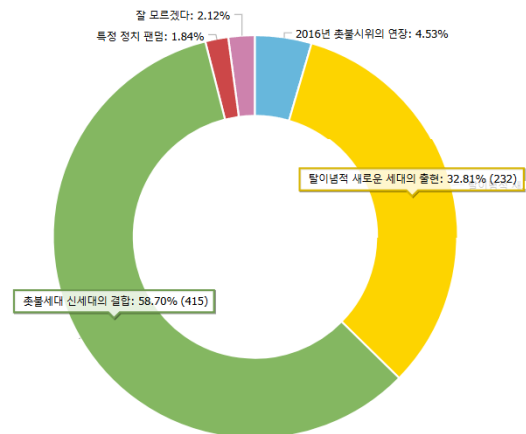
항 목		합계		자주 참여		간혹 참여		보통		별로 참여않음		거의 참여않음	
성별	남	437	61.8	199	45.5	145	33.2	47	10.8	24	5.5	22	5.0
	여	270	38.2	113	41.9	84	31.1	38	14.1	21	7.8	14	5.2
연령별	10대~30대	90	12.7	35	38.9	32	35.6	6	6.7	8	8.9	9	10.0
	40대~50대	307	43.4	145	47.2	87	28.3	39	12.7	21	6.8	15	4.9
	60대 이상	310	43.8	132	42.6	110	35.5	40	12.9	16	5.2	12	3.9
합계		707	100.0	312	44.1	229	32.4	85	12.0	45	6.4	36	5.1

다음으로 “내란 반대·탄핵 찬성 집회나 남태령 시위에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있습니다. 특히 20·30 응원봉세대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표 3〉 응원봉세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항 목	합계(명/%)	
2016~2017년 촛불세대가 주도하는 촛불 시위의 연장이다.	32	4.5
이념으로 나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의 출현이다.	232	32.8
2016년 촛불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결합이다.	415	58.7
주로 특정한 정당 구성원들이나 팬덤이 주도하고 있다.	13	1.8
잘모르겠다	15	2.1
합 계	707	99.9



즉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2016년 촛불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결합”으로 답을 했고, 다음으로 32.8%가 “이념으로 나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의 출현”으로 본 반면 4.5%만이 “2016~2017년 촛불세대가 주도하는 촛불시위의 연장”으로 답을 했다. 연령별로 나눠봐도 이러한 응답의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편이다. 성별 변수를 교차하면 미소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이념으로 나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의 출현”으로 이해하는 응답이 36%로 평균(33%)에 비해 높은 반면, 남성의 응답은 31%로 낮다.

〈표 4〉 20·30응원봉세대에 대한 이해

(단위: 명, %)

항 목		소 계		촛불시위의 연장		탈이념적새로운 세대의 출현		촛불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결합		팬덤 정치의 일환		잘모르겠다	
성별	남	437	62	24	5	135	31	259	59	7	2	12	3
	여	270	38	8	3	97	36	156	58	6	2	3	1
연령별	10대~30대	90	13	4	4	27	30	53	59	3	3	3	3
	40대~50대	307	43	13	4	102	33	180	59	5	2	7	2
	60대 이상	310	44	15	5	103	33	182	59	5	2	5	2
합 계		707	100	32	5	232	33	415	59	13	2	15	2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특정한 정당 구성원들이나 팬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는 응답이 상당히 낮은 것(2%)도 의미있는 답변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성별로 보아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2024년 12월 여의도 집회장이나 한남동 집회장에 모여든 응원봉세대를 둘러싼 세간의 역측, 즉 특정 정치인을 열렬하게 지지해온 강성 지지 팬덤이 주도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무성했고 2025년 1월 눈오던 한밤의 키세스 시위대는 그 절정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응원봉세대에 대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성 여성 지지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낮은 응답을 받았다. 신경아 교수가 파악했듯이 그러한 집회장에 나부끼던 수많은 깃발들, 즉 ‘그냥 고양이가 사랑하려고 깃발 만든 사람’, ‘전국낭만해적단’, ‘생파뿔연대’, ‘전국아늑한쓰레기통민연대’, ‘전국집에누워있기 연합’ ‘전국 치즈냥 연구회’ 등 셀 수 없이 많은 웃음을 머금게 하는 깃발들은 그 주체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을 간취할 필요가 있다(신경아, 2024).

다음 질문에서는 “현대 대한민국은 1987년 개정한 헌법 하에 있습니다. 또한 1987년 헌정 체제는 2025년 현재 한국의 위상이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론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식민과 독재를 겪었던 나라로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아래로부터 케이컬처(K-Culture)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공동체의 해체, 높은 자살율, 사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1987년 헌정 체제로부터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즉 1987년 헌정 체제로부터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 ‘아주 동의한다’는 응답이 79%,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 17%를 합하면 동의한다는 전체 응답이 96%를 차지하였다.

〈표5〉에 따르면 ‘아주 동의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남성(85%)이 여성(69%)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3%)>40~50대(76%)>10~30대(70%)로 응답률을 보여, 남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개인에 인터뷰를 실시하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60대 이상은 1987년 6공 헌법이 개헌되는 것을 목격한 세대로서 2025년 현재 그에 따른 헌정 질서가 후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남성의 높은 응답률은 여성에 비해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5〉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

(단위: 명, %)

항목		소계		아주 동의		다소 동의		보통		다소 반대		아주 반대	
성별	남	437	62	370	85	54	12	11	3	1	0	1	0
	여	270	38	185	69	68	25	12	4	3	1	2	1
연령별	10대~30대	90	13	63	70	16	18	8	9	2	2	1	1
	40대~50대	307	43	234	76	62	20	9	3	1	0	1	0
	60대 이상	310	44	258	83	44	14	6	2	1	0	1	0
합 계		707	100	555	79	122	17	23	3	4	1	3	0

다음에서는 주요 영역을 제시하여 사회대전환을 위한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따른 3번의 중복 선택을 허용했다. 그 과정에 1순위×3, 2순위×2, 3순위×1의 가중치를 뒤서 합계를 계산하도록 했다. 다음의 주요 영역에서 3개 순위로 선정하라는 질문을 하였다.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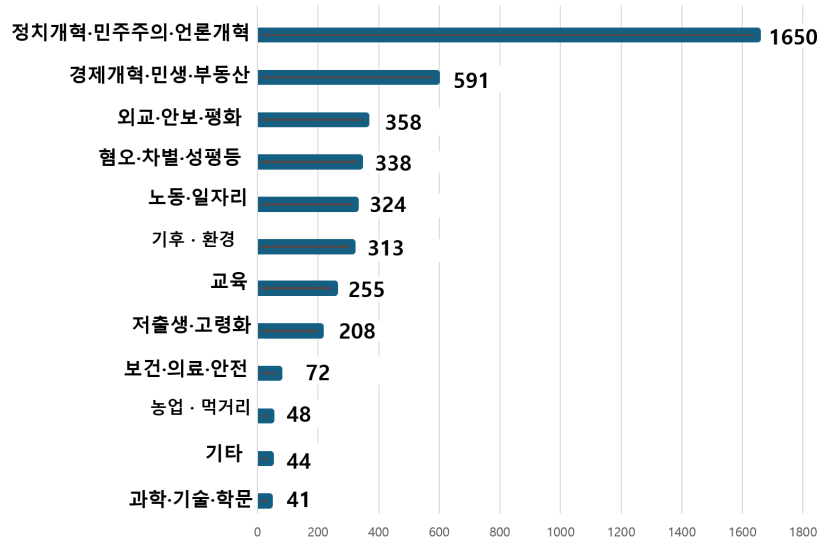
〈표6〉 사회개혁의 주요 영역

①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⑦ 교육
② 경제개혁·민생·부동산	⑧ 혐오·차별·성평등
③ 외교·안보·평화	⑨ 보건·의료·안전
④ 기후·환경	⑩ 저출생·고령화
⑤ 노동·일자리	⑪ 과학·기술·학문
⑥ 농업·먹거리	

〈그림 2〉에서 보듯, 이번 조사 응답의 1순위로 38.9%로 ‘①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2순위로는 13.9% ‘②경제개혁·민생·부동산’, 3순위 8.4%로 ③외교·안보·평화’로 답을 했다. 중복의 빈도별로 4순위로는 ‘⑧혐오·차별·성평등’, 5순위 ‘⑤노동·일자리’, 6순위 ‘④기후·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순위별 사회대전환 영역 중 중요하거나 시급한 영역

(단위: 명)



다음에서는 영역별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3순위 영역별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과제

우선 사회 대전환의 우선 순위 1위로 선정된 ‘①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7〉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검찰 및 사법부 개혁	91	7	2	0	0
언론개혁	84	13	2	1	0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79	16	5	0	0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79	18	3	0	0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65	30	4	1	0
선거제도(결선투표제, 비례성·다양성 확대)	61	29	7	2	1
지방분권	45	39	14	2	1
대통령제(4년중임)	39	38	16	4	3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한 ‘①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영역의 과제 중 8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을 물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개혁 과제를 순서로 보도록 한다. 제일 많은 응답을 한 것부터 순서로 보면 ‘검찰 및 사법부 개혁’(91%)>‘언론개혁’(84%)>‘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79%)과 ‘기본권 보장’(79%)>‘참여/숙의민주주의’(65%)>‘선거제도’(61%)>‘지방분권’(45%)>‘대통령제(4년중임)’(39%) 순이다. 이 영역의 과제들은 대부분 그간 사회·정치적 많이 언급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초저출생·고령사회가 되면서 다 강조되고 있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띈다. 특히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84%)이 남성(76%)보다, 연령이 낮을수록(10~30대 82%, 40~50대 81%, 60대 이상 76%) 더 관심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다소 의문이 드는 결과는 ‘대통령 4년 중임제’(약칭 4년 중임제) 응답률이다. 이 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39%)을 보이고 있다. 1987년 6공 헌법 개정 이래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들이 자주 개진되었고 최근에도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⁸⁾ 그럼에도 정치개혁의 과제로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고 응답자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두 번째 중요하거나 시급한 과제로 선정된 ‘경제개혁·민생·부동산’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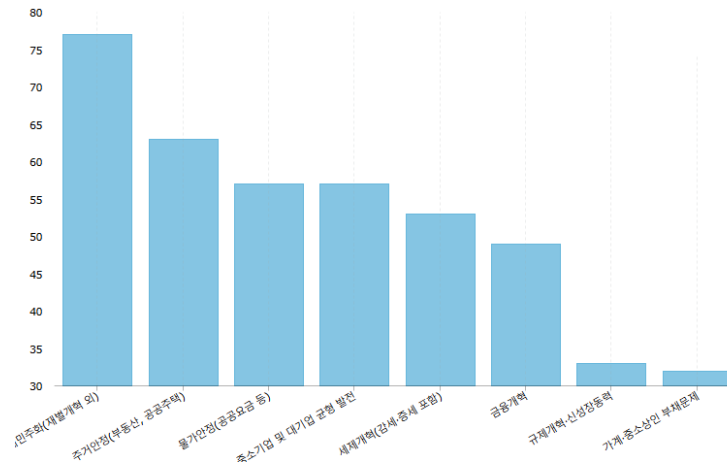
〈표 8〉 경제개혁·민생·부동산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경제민주화(재벌개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정거래 외)	77	19	5	0	0
주거안정(부동산, 공공주택 등)	63	24	3	0	0
물가안정(공공요금 등)	57	37	6	0	0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균형 발전	57	35	7	1	0
세제개혁(감세·증세 포함)	53	37	8	1	0
금융개혁	49	41	9	0	0
규제개혁·신성장동력	33	43	20	4	1
가계·중소상인 부채문제	32	51	15	1	0

8) 머니투데이 조사(2025/01/01)에서는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4년 중임제 응답률은 39.2%를 보였다(민동훈, 2025). 중앙일보 여론조사(2025/01/17)에서는 43% 선호 응답률(김원배, 2025), 강원도민일보 여론조사(2025/01/02)에서는 41.5% 선호 응답률을 보였다. 최근까지 한국 시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반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순위로 본 경제개혁·민생·부동산 영역의 개혁 과제



경제개혁을 둘러싼 중분류 과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높은 응답률 순서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제일 높은 응답률을 받은 과제는 ‘경제민주화’(77%)>‘주거안정’(63%)>‘물가안정’(57%)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균형 발전’(57%)>‘세제개혁’(53%)>‘금융개혁’(49%)>‘규제개혁·신성장동력’(33%)>‘가계·중소상인 부채문제’(32%) 순으로 응답되었다.

변수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민주화의 과제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별에 무관하게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이다. 반면 주거안정(부동산, 공공주택 등)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78%)의 필요도가 남성(64%)에 비해 훨씬 높고, 저연령층(10~30대 81%, 40~50대 76%, 60대 이상 68%)일수록 높은 응답이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균형 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살짝 높은 편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도(60대 이상 61%, 40~50대 55%, 10~30대 51%)가 더 높게 나오는 편이다. 세제개혁(감세, 증세 포함)나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의 경향이 비슷하다.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35%)가 남성(31%)보다, 60대 이상(37%)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받은 ‘가계·중소상인 부채문제’와 관련해서 여성(34%)이 남성(31%)에 비해 살짝 높은 편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도(10~30대 41%, 40~50대 33%, 60대 이상 29%)가 높아, 현실적으로 여성과 청년층의 빈곤화 문제(비정규직 문제와 연결)와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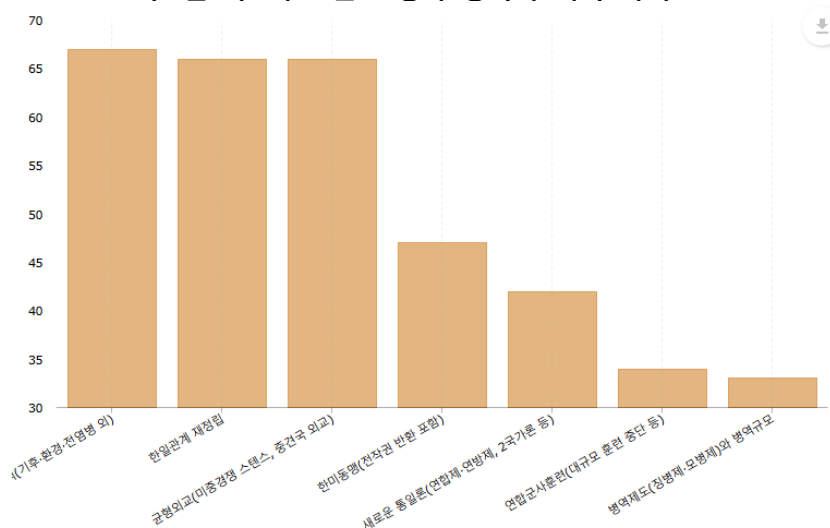
셋째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과제로 ‘외교·안보·평화’ 영역의 과제가 세 번째로 높은 필요성의 응답을 받았다.

〈표 9〉 외교·안보·평화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남북협력(기후·환경·전염병 외)	67	25	7	1	0
한일관계 재정립	66	21	8	2	2
균형외교(미중경쟁 스텐스, 중견국 외교) ⁹⁾	66	27	6	1	0
한미동맹(전작권 반환 포함)	47	30	16	4	4
새로운 통일론(연합제·연방제, 2국가론 등)	42	38	15	2	3
연합군사훈련(대규모 훈련 중단 등)	34	34	20	7	5
병역제도(징병제·모병제)와 병역규모	33	48	16	2	1

〈그림 4〉 외교·안보·평화 영역의 개혁 과제



외교·안보·평화 영역의 개혁과제를 중분류하여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응답도를 받은 과제를 순서로 보면 남북협력(67%)>한일관계 재정립(66%)과 균형외교(66%)>한미동맹(47%)>새로운 통일론(42%)>연합군사훈련(34%)>병역제도와 병역규모(33%) 순이다.

외교·안보·평화 영역의 개혁과제는 세 그룹으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1~3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개혁 과제인 남북협력 문제와 한일관계 재정립, 균형외교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협력 문제의 경우,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지만, 연령별로 고연령(60대 이상 73%)일수록

9) ‘스텐스 외교’ : 노태우정권 이래로 한국의 대표적인 중립과 도의적 지원을 중시해 온 외교 방식.

‘중견국 외교’ : 미들 파워(middle power) 국가로서 강대국이나 경쟁(또는 적대)국들 간의 중재 외교

남북협력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10~30대 60%, 40~50대 64%로서 일반인들의 남북협력문제의 관심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 문제에서는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성별로는 여성(71%) 대 남성(63%)로서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역사 갈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따른 한일간의 예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균형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68%)이 여성(63%)보다 조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40~50대 68%, 60대 이상 72%)은 10~30대(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응답률 과제 그룹에 해당하는 한미동맹(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등) 과제나 새로운 통일론(연합제·연방제, 2국가론 등) 과제를 보면, 전자의 경우 남성(49%)이 여성(43%)보다, 고연령(60대 이상 50%, 40~50대 46%, 10~30대 40%)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후자의 과제 역시 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세번째 응답률 과제 그룹에 해당하는 연합군사훈련(대규모 훈련 중단)이나 병역제도(징병제, 모병제)와 병역규모 과제에 있어서 전자는 성별이나 연령별에서 전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후자의 경우 여성(40%)이 남성(29%)보다 연령이 낮을수록(10~30대 43%, 40~50대 36%, 60대 이상 27%)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징병제 문제는 ‘군 가산점’ 폐지문제를 둘러싼 역차별 문제의 근거로 여겨지면서 여혐과도 관련된 문제라서 여성들의 관심이 높다거나 청년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분단극복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초저출생시대의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의 관심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3) 3순위 외 영역의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대전환 과제

다음으로 사회대전환에서 중요하거나 시급한 영역 3개 밖의 영역 중에 ‘혐오·차별·성평등 영역’, ‘노동·일자리 영역’, ‘기후·환경 영역’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혐오·차별·성평등 영역’에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5가지 과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각종 미디어,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어 있다(A. Klein, 2023).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SNS를 활용한 성범죄, 성폭력, 금품 갈취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확산되어 왔고, 급기야 2024년에는 우려되었던 딥페이크 사건들마저 터졌다. 더군다나 최근 12.3비상계엄사건 이래로 극우적인 유튜브의 활약은 2025년 1.19 서부지법폭동사건 당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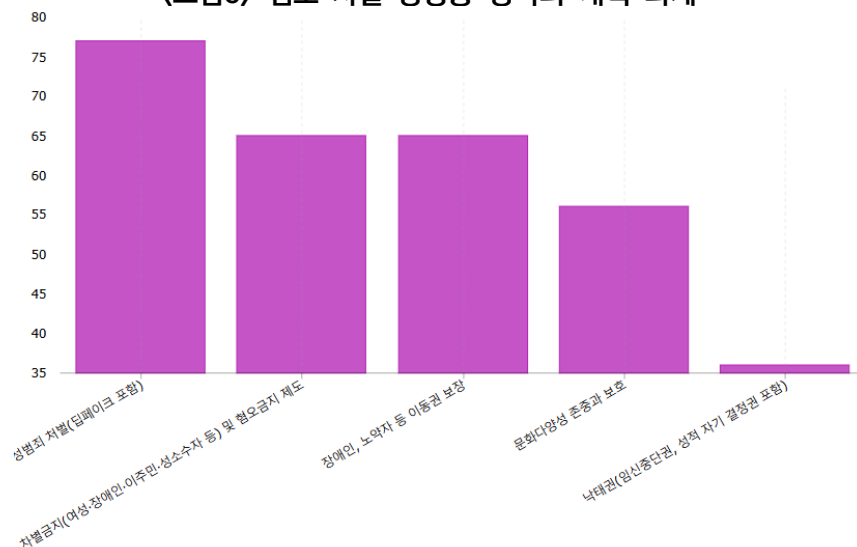
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 처벌(딥페이크 포함)’을 단연 관심의 집중(77%)을 낳았다.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성별로 보면 여성(88%)이 남성(70%)에 비해 관심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및 혐오금지 제도’에 대해서는 여성(73%)남성 60%)과 10~30대 청년세대(76%)>60대 이상 63%)의 관심이 높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 보장’ 개혁과제 역시 여성(73%)남 61%)과 10~30대 청년세대(82%)>60대 이상 62%)의 관심이 높다. 또한 ‘문화다양성 존중과 보호’ 과제에 여성(65%)이 남성(51%)보다, 청년세대(69%)가 60대 이상(52%)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선거에서 때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핫이슈가 되어온 ‘낙태권(임신중단권, Abortion-rights)’ 과제는 한국인들의 개혁 과제로서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50%)은 남성(27%)보다, 그리고 청년세대는(69%)는 60대 이상(30%) 보다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춰보면 한국 사회 갈등과 혐오에는 성별적 요소나 세대적 요소가 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0〉 혐오·차별·성평등 영역의 개혁 과제

항 목	(단위 %)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성범죄 처벌(딥페이크 포함)	77	19	4	0	0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및 혐오금지 제도	65	25	7	2	1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 보장	65	30	5	2	0
문화다양성 존중과 보호	56	36	7	1	0
낙태권(임신중단권, 성적 자기 결정권 포함)	36	43	17	3	2

〈그림5〉 혐오·차별·성평등 영역의 개혁 과제



이제 ‘노동·일자리 영역’의 개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공헌법 전면개정으로 노동운동의 차츰 정상을 회복하여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하고도 지난한 투쟁 과정을 거쳐 1999년 11월 23일에 서야 합법화되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적 경제위기는 닥쳐왔다. IMF 차관으로 외환위기를 미봉했으나 IMF의 요구에 수용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 유연노동 등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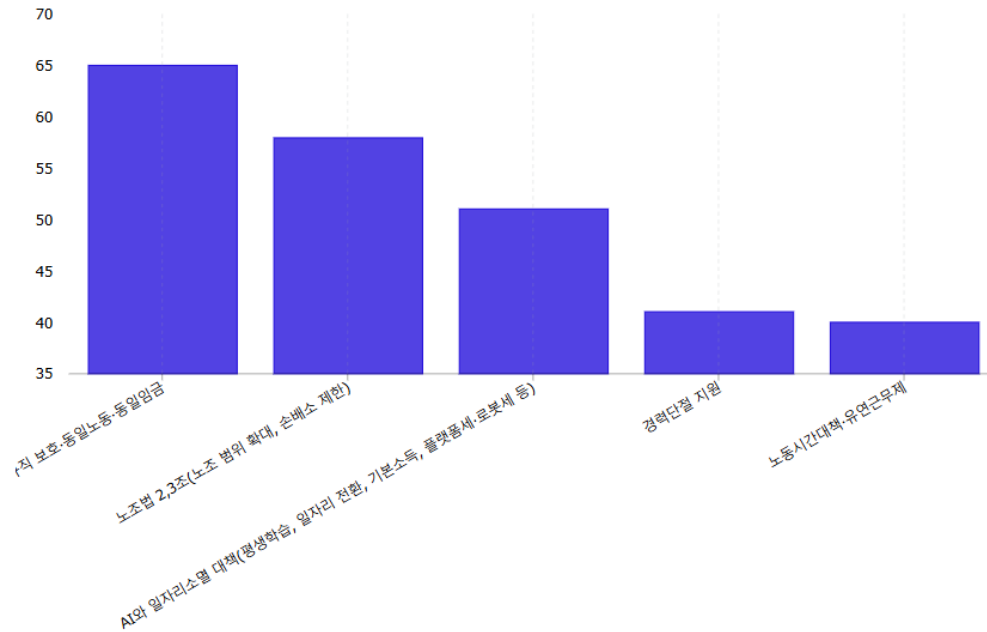
또한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힘입은 자본주의는 플랫폼경제를 적극 도입하였고, 때마침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재택근무방식과 택배경제의 사회적 수요 확대와 맞물려 정규직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초단기 임금노동을 확대시키며 노동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노동 현실은 이번 조사에도 적나라하게 반영되었다.

〈표 11〉 노동·일자리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비정규직 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65	28	6	0	0
노조법 2,3조(노조 범위 확대, 손배소 제한)	58	31	9	1	1
AI와 일자리소멸 대책(평생학습, 일자리 전환, 기본소득, 플랫폼세·로봇세 등)	51	41	7	1	0
경력단절 지원	41	50	8	1	0
노동시간 대책·유연근무제	40	49	9	2	1

〈그림6〉 노동·일자리 영역의 개혁 과제



노동·일자리 영역의 주요 개혁 과제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응답을 보인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65%) > ‘노조법 2,3조(노조 범위 확대, 손배소 제한)’ (58%) > ‘AI와 일자리소멸 대책(평생학습, 일자리 전환, 기본소득, 플랫폼세·로봇세 등)’ (51%) > ‘경력단절 지원’(41%)> ‘노동시간 대책·유연근무제’(40%). ‘비정규직 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과제를 성별로 보면 여성(69%)이 남성(63%)보다 적지만 유의미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10~30대(77%)는 40~50대(63%)와 60대 이상(64%)에 비해 큰 차이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조법 2,3조(노조 범위 확대, 손배소 제한)’¹⁰⁾에 대해서는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10~30대(71%)는 40~50대(59%)와 60대 이상(54%)에 비해 뚜렷한 차이도 보이고 있다. 또한 ‘AI와 일자리소멸 대책(평생학습, 일자리 전환, 기본소득, 플랫폼세·로봇세 등)’ 과제에 대해서는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53%)이고 40~50대(50%), 10~30대(46%) 순으로 조사되어 고령자의 AI에 따른 일자리 전환 문제에 대한 불편감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경력단절 지원’ 과제와 ‘노동시간 대책·유연근무제’ 과제에 대한 응답의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성별과 연령별로 뚜렷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와 3조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안)이 2024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고용노동부와 국무총리는 그 개정안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재의요구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경력단절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46%)이 남성(36%)에 비해, 10~30대(68%)가 40~50대(39%)와 60대 이상(32%)에 비해 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제 ‘기후·환경 영역’의 개혁 과제는 산업화와 무절제한 개발과 폭발적 화석연료에
너지의 사용이 남긴 결과에 대한 성찰과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면서, 국가적 정
책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
응을 담은 국제협약이자 당사국 196개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기후합의라는 데 역사
적 의미가 있고, 한국 역시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섭씨 1.5도 이행을 위한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¹¹⁾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다소 적극적이었다(박정호, 2023). 그러나 윤석열 정부 탈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오류를 범하는 등, 산업계의 감축 부
담을 낮추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기후환경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성동
훈, 2025). 중국은 발빠르게 탄소중립선언을 바탕으로 GDP 성장에서 녹색산업이
40%를 차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고(김성진 외, 2021), 미국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
협약 탈퇴와 함께 원유와 천연가스 산업을 확대하겠다고(박성현, 2025)고 했다. 한국은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에너지 자립이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기후·환경
영역’의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번 응답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관심을
가질 법하다. ‘기후·환경 영역’의 개혁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표 12〉 기후·환경 영역의 개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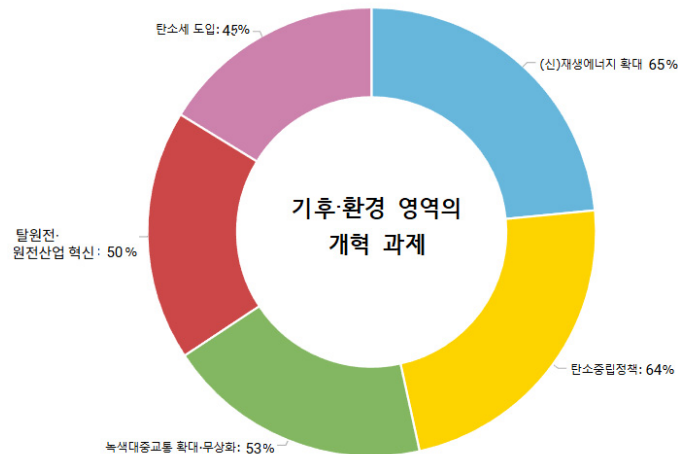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공 투자·개발, 계통연계 확충, 에너지펀드, RE100산단 등)	65	29	5	1	0
탄소중립정책	64	30	5	1	0
녹색대중교통 확대·무상화	53	38	9	1	0
탈원전·원전산업 혁신	50	36	10	3	1
탄소세 도입	45	42	11	1	1

11) 참고: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webarchives.pa.go.kr/19th/www.2050cnc.go.kr/base/main/view> (검색일: 2025/02/27)

〈그림 7〉 기후·환경 영역의 개혁 과제



‘기후·환경 영역’의 중범위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5개 중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공 투자·개발, 계통연계 확충, 에너지펀드, RE100산단 등)’(65%)>‘탄소중립정책’(64%)>‘녹색대중교통 확대·무상화’(53%)>‘탈원전·원전산업 혁신’(50%)>‘탄소세(도입)’(45%) 등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공 투자·개발, 계통연계 확충, 에너지펀드, RE100산단 등) 과제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여성(69%)이 남성(63%)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와 60대 이상 그룹의 67%인 10~30대가 53%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탄소중립정책’에서는 여성(72%)이 남성(6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응답을 한 반면, 연령별로는 10~30대(59%) 응답률이 평균에 밀린다.

다음으로 ‘녹색대중교통 확대·무상화’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60%)이 남성(48%)에 비해, 10~30대(62%)가 40~50대(54%)와 60대이상(48%)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탈원전·원전산업 혁신’에 대해서는 여성(57%)이 남성(46%)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되, 성별로는 일관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탄소세(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성(51%)이 남성(41%)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전반적으로 ‘기후·환경 영역’ 개혁 과제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은 탈산업화 지향을 보이는데 반해 남성 응답자들은 전통적 산업화 지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4) 교육 영역과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개혁 과제

‘교육 영역’과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사회개혁을 위한 과제는 사회적으로는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중합계를 할 경우 7순위와 8순위를 차지했다. 우선 교육 영역의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높은 응답을 받은 순서로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표13〉 교육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역사교과서·역사교육	75	21	3	1	0
기본 교육내용 개혁(노동·인권·생태·성평등·민주시민교육)	72	23	4	1	0
입시제도 개혁	67	25	7	1	0
창의력·비판적 사고·협업 중심 교육혁신	64	32	2	1	0
대학개혁(무상교육과 대학경쟁력, 인문학과 기초학문 육성)	61	32	6	1	1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56	34	9	2	1
교권과 학생인권	56	36	7	0	0

교육 영역의 개혁 과제는 3순위 안에 꼽히지는 못했으나, 중범위 개혁 항목을 보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영역의 주요 개혁 과제에서 역사교육 문제(7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본 교육내용 개혁(노동·인권·생태·성평등·민주시민교육)’¹²⁾ 문제(72%)가 다음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입시제도 개혁’(67%)>‘창의력·비판적 사고·협업 중심 교육혁신’(64%)>‘대학개혁(무상교육과 대학경쟁력, 인문학과 기초학문 육성)’(61%)>‘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56%)과 ‘교권과 학생인권’(56%)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역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79%)이 남성(72%)보다, 60대 이상(78%)이 40~50대(74%), 10~30대(67%)에 비해 응답율이 높다. 또한 ‘기본 교육내용 개혁’은 여성(81%)이 남성(67%)보다 월등히 응답율이 높고, 10~30대(79%)가 40~50대(72%)와 60대 이상(71%) 응답율이 높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10~30대는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

12) 이번 조사에서 기본교육으로 분류한 노동·인권·생태·성평등·민주시민교육 등은 일부는 사회과 교육 주제이지만 대부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해당되는 주제다. 또한 학습 주제 중 일부는 의무교육이지만 일부는 권장사항으로서 실효성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거버넌스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등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당시 교육 과정 상 기본 교육내용이 부재했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시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불문하고 응답률이 비슷하게 높은 익숙하면서도 한국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창의력·비판적 사고·협업 중심 교육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70%)이 남성(61%)에 비해 응답률이 높지만, 연령별로는 일관성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대학개혁(무상교육과 대학경쟁력, 인문학과 기초학문 육성)’ 과제에 대해서도 여성(66%)이 남성(58%)보다, 10대~30대(71%)가 40~50대와 60대 이상(60%)보다 응답률이 높다. 또한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사립대학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59%)가 남성(54%)보다, 10대~30대(59%)가 40~50대와 60대 이상(55%)에 비해 응답률의 적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과제에 대해서 여성(63%)가 남성(52%)보다, 10대~30대(61%)가 40~50대(58%)와 60대 이상(53%)에 비해 응답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시 문제를 제외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젊을수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을 이번 조사에서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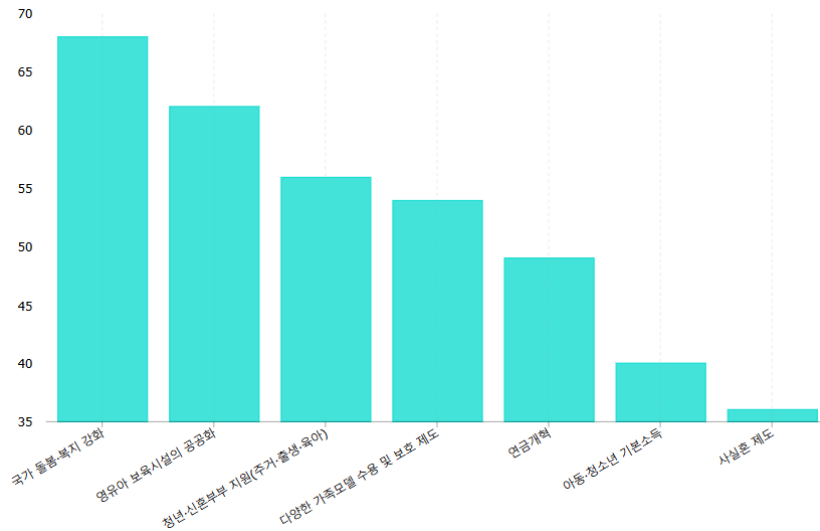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필요성과 시급성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개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4〉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국가 돌봄·복지 강화	68	27	5	0	0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화	62	32	5	1	0
청년·신혼부부 지원(주거·출생·육아)	56	37	5	1	1
비혼(출산)·동거·입양 등 다양한 가족모델 수용 및 보호 제도	54	37	7	2	1
연금개혁	49	39	10	1	1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40	41	16	2	1
사실혼 제도	36	46	16	2	0

〈그림 8〉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개혁 과제



세계적 저출생문제와 관련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문제는 노동력 차원이나 병력 차원이나 세금원 관련된 국가적 수준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역설도 존재한다. 저출생으로 인해 고용시장의 치열한 경쟁주의나 입시제도가 평등하게 바뀔 수 있고, 가족이나 개인의 삶에 질적 향상이 가능하고, 가족간 평등 문화가 정착하여 가부장 문화가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까지 다 고려했는지 불확실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영역 순위에서 밀렸다.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중범위 개혁 과제 중에서 높은 응답률을 받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가 돌봄·복지 강화’(68%)>‘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화’(62%)>‘청년·신혼부부 지원(주거·출생·육아)’(56%)>‘다양한 가족모델 수용 및 보호 제도’(54%)>‘연금제도’(49%)>‘아동·청소년 기본소득’(40%)>‘사실혼 제도’(36%) 순이다. 상대적으로 이 영역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대개 여성과 10~30대 청년층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보건·의료·안전 외 사회개혁 과제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영역으로는 ‘보건·의료·안전 외 사회개혁’(9순위), ‘농업·먹거리’(10순위), ‘과학·기술·학문’(11순위) 순이다. 설령 후순위로 밀렸다고는 하지만, 어느 영역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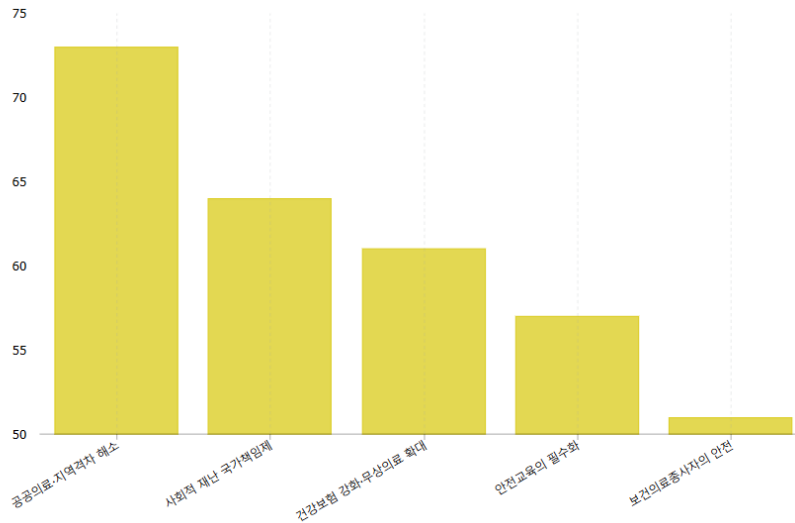
우선 ‘보건·의료·안전 외 사회개혁 영역’의 중범위 개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5〉 보건·의료·안전 외 사회개혁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공공의료 확충·지역격차 해소	73	24	2	0	0
사회적 재난 국가책임제	64	31	5	0	0
건강보험 강화·무상의료 확대	61	32	6	1	0
안전교육의 필수화	57	36	6	0	0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	51	41	7	0	0

〈그림 9〉 보건·의료·안전 외 사회개혁 영역의 개혁 과제



최근 의료개혁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목소리가 큰 것과는 반대로 개혁의 진정한 내용이 없이 18년간 변화가 없었던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024년 본격적으로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전국 의대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개혁의 우선 과정에서 뒤로 밀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범위 개혁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지역격차 해소’(73%)>‘사회적 재난 국가책임제’(64%)>‘건강보험 강화·무상의료 확대’(61%)>‘안전교육의 필수화’(57%)>‘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51%) 등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농업·먹거리 영역’ 개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농업과 먹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영위 과제이다.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농업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농업인구가 4%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농업 위기는 깊어가고 있다(원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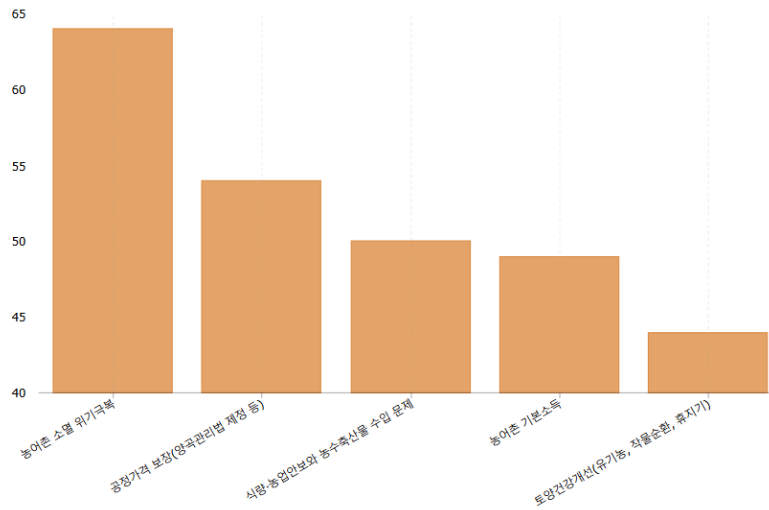
2025). 한편 정부는 위기의 농업에 대한 자구책으로 스마트 농정이나 농지 규제 완화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포폴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마저 이를 거부하면서 2024년 12월 21일 ‘남태령 대첩’이 발생되기도 했다. 그만큼 농민들에게는 양곡관리법은 절박한 문제이자, 한국의 식량자주권을 지키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표16〉 농업·먹거리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지역(농어촌) 소멸 위기극복	64	30	5	1	0
공정가격 보장(양곡관리법 제정 등)	54	36	8	1	0
식량·농업안보와 농수축산물 수입 문제	50	39	9	1	1
농어촌 기본소득	49	40	10	1	1
토양건강개선(유기농, 작물순환, 휴지기)	44	46	10	1	0

〈그림 10〉 농업·먹거리 영역의 개혁 과제



이제 ‘농업·먹거리 영역’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자. ‘지역(농어촌) 소멸 위기극복’(64%)>‘공정가격 보장(양곡관리법 제정 등)’(54%)>‘식량·농업안보와 농수축산물 수입 문제’(50%)>‘농어촌 기본소득’(49%)>‘토양건강개선(유기농, 작물순환, 휴지기)’(44%) 순서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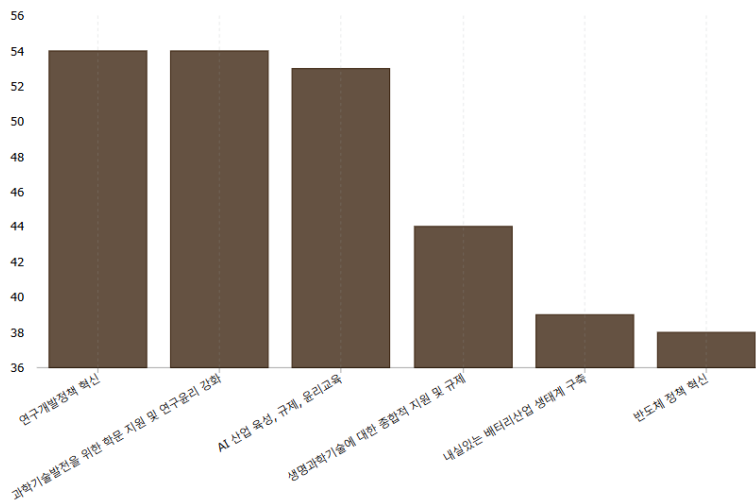
다음으로 ‘과학·기술·학문 영역’ 개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과학·기술·학문 영역은 시민들의 일상과 거리를 두고 있고, 그 결실을 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시대에는 연구개발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과학기술 대열에서 낙오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2025년 1월 한국은 윤의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는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2024년 12월 공개된 딥시크는 적은 비용(80억원으로 챗GPT 개발비의 18분의 1수준), 저사양 칩으로 챗GPT에 맞먹는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 10여년 간 인공지능과 빅테크에 엄청난 R&D비용을 투여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말 한 마디에 2024년 연구개발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하여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식장의 ‘졸업생 입틀막’ 사건과 같은 눈뜨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 바이오 산업 역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규제 상황에 처하는 상황에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과학·기술·학문 영역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개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더 시급한 개혁 과제가 밀려 후순위가 되었다.

〈표 17〉 과학·기술·학문 영역의 개혁 과제

(단위 %)

항 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R&D 정책 혁신	54	39	6	1	0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학문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	54	39	6	1	0
AI 산업 육성, 규제, 윤리교육	53	37	8	1	1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규제	44	45	11	0	0
내실있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	39	48	12	1	0
반도체 정책 혁신	38	47	14	1	1

〈그림 11〉 과학·기술·학문 영역의 개혁 과제



‘과학·기술·학문 영역’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R&D 정책 혁신’(54%)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학문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54%)> ‘AI 산업 육성, 규제, 윤리교육’(53%)>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규제’(44%)> ‘내실있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39%)> ‘반도체 정책 혁신’(38%) 순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5. 맺음말: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찰, 꾸준한 실천으로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자

이상과 같이 11개 영역 78개 항목에서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회개혁의 과제를 살펴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영역이나 과제도 적지 않았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여 많은 의견이 나왔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분류하고 의미있는 의견을 제안해보고자 한다.[부록2: 대전환을 위한 자유 의견 리스트]

응답자 707명 중 308명(43.6%)이 응답하여 응답자들이 놀라운 관심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한 ‘전민동’이라는 자긍심에 기초한 사회행위가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308명의 의견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대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한 의견

둘째, 설문 내용에 대한 종합적 또는 부분적 강조한 의견

셋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의견

시간과 지면 관계상 308명의 의견을 다 분석하기를 벅차기 때문에, 눈에 띄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몇 편 소개하고자 한다.

1) 사회대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방향 제시 의견

많은 응답자들이 사회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 의견과 함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대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이나 방향,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21세기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제 해방과 동시에 맞이한 분단과 전쟁, 대한민국 정부에 뿌리내린 친일반민족 세력과 독재 문제를 둘러싼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하며, 그를 통해 정의로운 국가, 한반도 평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평화로운 나라를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 정책적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대전환은 인간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표피적인 정책보다 방향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있는 토론(공론장)이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인식공유를 해야 할 듯 합니다.”(14번)

“깊이 뿌리 내린 친일, 내란, 부패, 권위주의 세력이 잘 정리되고, 사회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정의로운 공동체, 서로가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75번)

“내란 잔당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이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발적 반성과 사과없는 어설픈 화해, 사면으로 면죄부 줘서는 안됩니다! 모든 정책이 장기적 플랜을 거시적으로론 가지되 현실운영에 있어선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80번)

“국민기본권 제약의 근본조건인 전쟁 상황 종료, 종전 문제의 국민 여론화가 필요. 전쟁 상태를 방치한 채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간 불평등 예측관계, 군사주권 유린, 정치적 비민주-독재가 악순환 되고 있음. 분단의 성격적 본질이 바로. 전쟁체제-남북적대구조임. 전쟁 상태의 종식, 종전이 사회대개혁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함.”(54번)

또한 대전환의 원칙으로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안을 도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교수나 지식인, 특정 엘리트가 주도하면서 시민사회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아야 하며, 시민사회가 기존 정당에 대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기존 정당이 대전환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의미심장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보천리 동행만리(牛步千里 同行萬里)’의 정신으로 꾸준히 다수의 공감과 지혜를 모아 시급한 것부터 단기,중장기를 설정하여 사회대전환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수의 지혜를 구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함. 그로 인해 정책제안 그리고 이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함.”(84번)

“국민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반보(半步) 앞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 개혁안은 헛일이 된다.”(56번)

“기존 정당과 거리를 두고 독립성, 자주성을 가지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당의 이중대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에 대한 대전환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바랍니다.”(71번)

“다양한 논의로 그치지 말고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실현될 때도 교수(지식인)들의 의견만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주시기를”(86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꾸준히 숙의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 몇몇이 계속해서 하시던(해오던) 사람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 바이다.”(87번)

“단기적으로 의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선 등 정치일정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중장기로 개헌과 법개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90번)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고 다음이 국민화합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안하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286번)

마지막으로 자유 의견에는 최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념적 갈등과 정적에 대한 혐오문제에 대한 의견과 그 해결책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여러 명에게서 나왔다. 다소 분노에 찬 극단적 의견도 있었으나, 통합과 단결의 필요성과 기준으로서 “친일파 파시스트 세력을 배제하자”(16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타협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원칙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통하여 대타협을 이루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공론화 숙의 과정에 온국민이 참여하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281번)

2) 설문 내용에 대한 종합적 또는 부분적 강조한 의견

이번 조사 결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 등 시민/민중의 참여를 중시했다. 또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래 현재 한국 정치사회 고착된 양당 정치 관행에 대해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정당 정치의 기준으로서 ‘공공성 강화’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극우와 보수/자유주의 양당제로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탄핵 이후 다당제를 통해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누구도 배제됨이 없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전환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64번)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은 대체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와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

주주의, 시민의회 등을 강조하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강조했다.

또한 분단과 독재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얘기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근본모순을 바로잡아야 다른 모순도 하나씩 풀립니다. 이번 내란의 근원인 냉전 분단 체제를 이제라도 해체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한국 자주화에 있어서도 광장의 목소리, 비상행동의 정리된 요구안을 기다리겠습니다.”(307번)

다음으로는 이 인용문을 꼽고 싶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장애인 이 동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이고 일부 종교계에 위탁 중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국가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아닌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85번)

85번의 의견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질문지 12-1번에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및 혐오금지 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도 관련이 있다. 이 법안은 10년이 넘도록 제정이 보류되고 있고, 2023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CCPR)는 이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이 법의 제정에 대해 소극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강조와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강조가 있었다. 오래된 세제개혁, 재벌개혁, 토지공개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주장되었다.

“경제민주화를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등 자산의 유무에 있으므로 세금은 자산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강남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편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 가까이 설치해야 합니다. 세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특례나 예외, 감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형법도 개정하여 양형을 전면 조정해야 합니다.”(31번)

또한 노동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3권으로 환원되는 문제만이 아닌, 노동의 인간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인간수명에 맞는 노동구조로 변혁이 필요합니다. 노동은 생계유지만이 아닌 인간이 사회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업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300번)

또한 ‘농업·먹거리 영역’의 개혁 과제에도 GMO 문제나 우리농산물에 대한 의견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사회대전환 논의에 헌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제7공화국 비전 수립을 위한 총론”(290번)을 정립하는 제안도 있었다.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여러 명에게서 나왔다. 그 중 대통령제나 국회의원제, 사법부 개혁안이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검찰 개혁 주장도 많았다.

3)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의견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못하여 자원하여 제시한 의견 중 발표자의 관점에서 가장 멋진 의견으로 다음을 꼽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박물관이 아닌 교정에서 춤추는 나비와 꿀벌이 볼 수 있는 친자연 환경을 물려주자(……)”(5번)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큰 공동체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법률로 인정해야 합니다.”(215번)

5번이나 215번 의견을 놓고 볼 때, 이번 조사의 한계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기후·환경’ 영역 개혁과제에는 사회개혁을 주로 정부 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사회대전환에는 시민사회 영역의 의식과 방법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지 못했다. 따라서 ‘기후·환경’을 둘러싼 진정한 사회대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친자연 환경’이라는 가치와 방향에 대한 성찰적 질문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위에 올리지 않았으나 자유 의견에는 성별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응원봉세대’와 2024~2025년 탄핵과 내란사태를 둘러싼 주체 문제를 둘러싼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11번과 22번의 주장은 2030 응원봉세대의 주체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2030 응원봉세대가 아니라 2030 응원봉 여성세대라 봅니다. 대부분이 여성인데 더 부각되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11번)

“문항의 2030 청년이라는 단어로는 이번 응원봉 집회 세대의 특징을 가시화할 수 없습니다. 2030 청년을 떠나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의 수많은 구석에서 차별받고 외면당해온 소수자들의 분노가 연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2016년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많지만, 이제야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집회의 경우 소수자 외에는 광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보인 것 같구요. 문항의 성별도 여성, 남성으로만 문의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성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광장에서 확인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22번)

9번의 주장은 단순히 2030 여성 참여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다. 현재 2030 여성 참여자들에 구세대의 사회운동에 대한 인정투쟁의 성격도 강하다.

“2030 여성 참여에 대해 지나치게 칭찬하는 글이 많다. 빛의 혁명이니 새로운 세대 탄생이니 오버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집회에 2030 여성들만이 참여한 게 아니다. 다른 소외받는 계층과 남성들을 생각해서 그런 발언은 알아서 자제를 해야 한다. 군인은 시민에게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은 앞세대에서 피흘리며 만들어놓은 것이다.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이 2024년에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것이다. 그런 세대에 대한 존중해야 한다.”(9번)

이와 같이 갈등의 가능성을 내재한 주장에 대해 ‘성별의식 격차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실시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대면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들이 서로의 차이만을 앞세우게 되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게 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고 결렬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응원봉 여성세대들과 신남성연대 등의 대결 분위기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사적 이해와 미래 지향적 관점을 사회와 미래를 본다면 현재 관점과 입장에 고착되어서는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듯이 현재에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세대 역시 공부/학습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는커녕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통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자유 의견에서 가장 뼈아픈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질문이 너무 짧거나 무의미한 내용이 많습니다. 매번 떠드는 전환 혁신 창조 변화 이따위 내용 별 의미도 없고 지겹기만 합니다. 한번에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고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게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조사들부터 매번 전환이

니 대전환이니 수사적인 표현들로만 ”좋은게 좋은 거지“라는 식의 여론을 내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방향과 개선점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255번)

참으로 성찰적 의견이지 아니한가. 우리가 주장하기는 쉬우나,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과 노력,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 사회대전환에 전면 헌법 개정은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헌법 개정 방식을 둘러싼 법적 절차와 함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6공 헌법처럼 여야의 절충방식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되는 점이다. 반드시 사회대전환을 위한 개혁의 가치와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여야 합의로 진행한다면 7공 헌법(?)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8공 헌법을 얘기하게 될 것이다. 비상계엄령을 던진 윤의 충격 이후 극우정당으로 치달아온 ‘국민의 힘’ 정당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다양한, 때로는 진보적 가치와 주장,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진보의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와 보고서는 이러한 입장과 주장을 담아내기 위한 시작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와 전민동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참고문헌

- 강명숙. 2021. “역사 속의 대학, 21세기 대학의 현주소와 과제”. 김귀옥 기획. 『(제3판)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한울.
- 국토교통부. 2022.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대한민국국가지도집 청소년판』. 국토교통부.
- 김귀옥. 2003. “촛불시위의 사회학: 주한미군에 의한 효순·미선 사망1주기에 즈음하여”. 『진보평론』 제17호(가을). 412-429.
- 김귀옥. 2023.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문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1호. 131-168.
- 김귀옥·윤충로.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성진 외. 202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배. 2025. 「4년 중임제 개헌이 최선인가」. 《중앙일보》 2025/01/17.
- 김은정·유홍식. 2020. “이념 성향·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 뉴스 노출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1집 1호. 93-125.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편집부. 2008. 「대학 진학률 84% 육박...학생 수 지속 감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8/09/03.
- 류경완. 2014.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통일뉴스》 2014. 11. 5.
- 민동훈. 2025. 「'대통령 단임제' 끝내자는 국민들...10명 중 4명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머니투데이》 2025/01/01.
- 박남기·임수진. 2015. “5.31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4호. 1-28.
- 박성현. 2025. 「[트럼프 2.0] 취임식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국내 기업도 영향권」. 《매일신문》 2025/01/21.
- 박세열. 2025. 「조갑제 “윤석열, 김일성 이후 가장 많은 인명.재산 피해 국민에 가한 사람”」. 《프레시안》 2025/02/24.
- 박정호. 2023.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과 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159-180.
- 서부원. 2025. 「'서부지법 폭동' 본 10대들의 무서운 예언」. 《오마이뉴스》 2025/01/22.

- 성동훈. 2025. 「결국 해 넘긴 11차 전기본…정책 불확실성 속 업계 '한숨'」. 《뉴스1》 2025/01/06.
- 신경아. 2024. 「"尹 탄핵 집회 이색 깃발들은 '제3의 세력', 민주당에 대한 경고"」. 《프레시안》 2024/12/25.
- 신수진. 2025. 「[신년 여론조사] 도민 41.5%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강원도민일보》 2025/01/02.
- 신용수. 2025 「‘탄핵은 고도의 통치행위’ 주장하는 윤 지지자들」. 《뉴스1》 2025/02/22.
- 신진욱. 2024. 『그런 세대는 없다』. 개마고원.
- 오준호. 2024.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 그들의 진짜 노림수」. 《오마이뉴스》 2024/12/ 12.
- 원재정. 2025. 「농업 위기 시대, 30년 농경제학자가 말하는 ‘농의 가치’」. 《한국농정》 2025/02/19.
- 윤수현. 2023. 「법원,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5년7개월만에 실체 인정」. 《미디어오늘》 2023/11/19.
- 이종원·김영인. 20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혜원. 2025. 「尹 방어권 사수… “우파의 첫 승리” 환호」. 《스카이데일리》 2025/02/11.
- 최아진 외. 2023.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Farkas, Johan·Jannick Schou. 2018. “Fake News as a Floating Signifier: Hegemony, Antagonism and the Politics of Falsehood”. *JAVNOST-THE PUBLIC*, Vol. 25. No. 3. 298-314.
- Hegel, G W. F.. 박배형 번역. 2017. 『헤겔과 시민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Klein, Adam. 2023. 한정라 옮김. 『온라인 세계의 극단주의: 광신, 인종차별, 분노』. 한울.
- Schmitt, Carl. 2010[1922],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발 제

촛불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창 희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촛불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창 희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1. 광복 80주년과 정치·경제·군사적 불확실성

2024년은 한반도 근현대 민중사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1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투쟁하며 전진해왔던 남한 대중들은 무능·부패·독재·호전·매국 윤석열 정권을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면서 남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보의 대역사를 기록하였다. 중진국 이상의 국가에서 10년도 안 되어 2016년 박근혜 국회 탄핵에 이어서 두 번째 탄핵을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중들은 올해 광복 80주년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한 대중은 분단과 한국전쟁의 상흔에도 1960년 4.19 혁명을 일으켰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을 전개하였으며, 2016년 박근혜 탄핵투쟁에 이어서 현재 윤석열 탄핵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마다 역사적 대회전이 회자되었고, 이를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는 진전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4년 12월 3일 남한 사회에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재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사태가 12월 4일 새벽 국회의 표결도 거부되고, 2025년 1월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체포, 구속되었음에도 극우세력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지역마다, 대학마다 탄핵반대 집회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집권

초기부터 일부 탈북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활용하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해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한 내 민주적 정치세력을 중북좌파로 몰아서 처단하려는 회색지대 안보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결하듯이 2023년 12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였다.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군사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다행히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트럼프 2기 집권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3월 12일부터 발효되는데, 남한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후 타 제품에 대한 보호관세 강화 등이 예견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이 예상되는 불확실한 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를 실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광복 80주년에 반드시 윤석열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에서의 민주정부 수립으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고자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그들의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을 활용해 한반도 군사충돌을 억제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군사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통해 경제적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어 인도와 동남아 등 국제 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결해나가야 한다.

2. 대중들의 진출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목소리

젊은 세대의 진출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국회로 모여든 대중들은 군인들에게 항의하고, 장갑차 앞에 드러누우면서 민주주의를 사수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12월 14일 국회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여의도에는 수백만의 대중들이 집결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였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학교 교육의 민주화가 낳은 성과이다. 2010년 학교에서 직접 체벌을 금지시킨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도입,

2011년 학교 복지를 대중화시킨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면화, 2015년 비록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민주적 교육내용을 증가시킨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등 2010년대 이후 학교 교육의 민주화 속에서 현재의 청소년, 대학생, 20~30대 여성들이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대학생들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완전히 무시하며 실행된 비상계엄사태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을 보면서 분노하여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물론 20~30대 남성의 참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전히 현재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20~30대 남성들은 비록 학교 교육의 민주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대결적인 냉전의식이 크게 남아 있는 군대 생활을 통해 보수화되는 동시에, 저성장 경제침체 속에서 좋은 직장에 대한 취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잉여인간처럼 취급받게 되자, 비교적 사회적 지위를 민주적으로 높이면서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려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정치적 보수 입장을 나타내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경향도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의 사회구조적 각성과 더불어 민주주의로 더욱 전진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의 허구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중들의 진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집단은 민주당 평당원들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른바 '민주시민'들이라고 불렸던 민주화에 열성적인 대중들은 수십만 명이 모였던 1991년 5월 열사 투쟁 등에서 대학생들이나 민중단체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다면, 1998년 수평적 정권교체가 실현된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에게 힘을 많이 보태주었다. 이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압사 여중생 효순·미선 추모투쟁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2008년 광우병 검역주권 쟁취 촛불집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여기서 촛불시민들이 된 민주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 현실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으로 많이 입당하였고, 이는 2021년, 즉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의 20대 대선 전부터 크게 상승하였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2023년 8월 24일 중앙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45만 4,332명이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2%(115만 8,423명)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로 부상한 2021년 이후 입당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거리 집회에는 민주당 평당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것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시민사회진영이 왜소화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나아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

하였던 과거 민주화 세대였던 장년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관망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은 2024년 10월 말 윤석열-명태균 공천개입 통화녹음 공개와 11월 7일 윤석열 자폭 기자회견을 계기로 자신들이 속한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이러한 힘들이 모여 현재 윤석열 탄핵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대개혁 의제로!

박근혜 탄핵국면에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박근혜 탄핵 인용 및 구속과 조기대선 민주정부를 실현하였다. 당시 수립된 문재인 민주정부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와 평화를 진전시키고자 박근혜 탄핵국면을 주도하였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고,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윤석열 탄핵국면에서는 1,7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질적인 사회대개혁 의제를 선정하려고 한다. 비상행동은 △정치개혁·민주주의, △경제·민생, △평화·외교·안보, △기후위기 대응·정의로운 전환, △보건·의료·돌봄·복지체계, △노동·일자리, △생명·안전, △성평등·소수자, △언론·문화예술·표현의 자유, △먹거리·식량주권, △교육 불평등·청년사회대개혁 등 11대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는 비상행동의 주요 소속단체로서 선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한 사회대개혁 의제에 대해서 과거의 나열식 개혁과제 제안을 극복하고자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대개혁 과제의 실현은 매우 어렵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100대 촛불개혁과제’에서 10번째 주제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의 4항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당시 박근혜 탄핵국면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되게 반영되었고, ‘국가보안법 개정’ 조차 공약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윤석열 탄핵국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전국비상시국회의’의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실현방안으로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물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공약으로의 현실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윤석열 탄핵국면의 새로운 특징으로 극우파시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민주정부의 선거공약으로 가능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대개혁 과제 미실현은 박근혜 탄핵 이후 수립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당시 탄핵을 주도한 중장년세대의 실망감을 넘어서 윤석열 탄핵 이후 수립될 민주정부에 대한, 현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윤석열 탄핵국면 초중기 과거 민주화세대였던 중장년층의 정치적 관망이 나타났듯이, 이른바 ‘윤석열 탄핵세대’인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기회주의적인 극우파시즘 등 한국 사회의 정치적 수구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3. 극우파시즘에 대항하는 선거집권연합 문제

한국 사회에 본격화되는 기회주의적인 극우파시즘의 변태성

현재 한국 사회에 시대적 흐름을 반동으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로 극우파시즘으로 향하는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의 최후변론에 지각 출석하여 40분 정도로 진행된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을 듣지도 않고, 비상계엄 정당화에 69분을 할애하면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사용하였다. 오만 불순한 이들의 정치 형태는 그야말로 변태적인 기회주의적인 극우파시즘을 지니고 있다.

과거 파시즘은 좌파 척결의 목적을 위해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명분으로 대자본과 협력하면서 그들의 지원 하에서 파시스트와 기득권들의 이익을 영구히 지속하려는 의도 속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위해 대중들을 훈육시켰고, 식민지 강탈을 자행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반발도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결국 그들은 독재와 전쟁의 연속 속에서 그들의 존재 기반인 사회마저 붕괴시켰다. 이에 비해 현재 포스트파시즘 세력들은 의회정치를 활용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여 국가권력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협

오와 차별의 보수적인 정치를 관철시키면서 전통적인 그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잔인했던 과거와 차별화하면서 사회적 인정을 재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로 인해 지나친 폭력이나 전쟁은 비교적 자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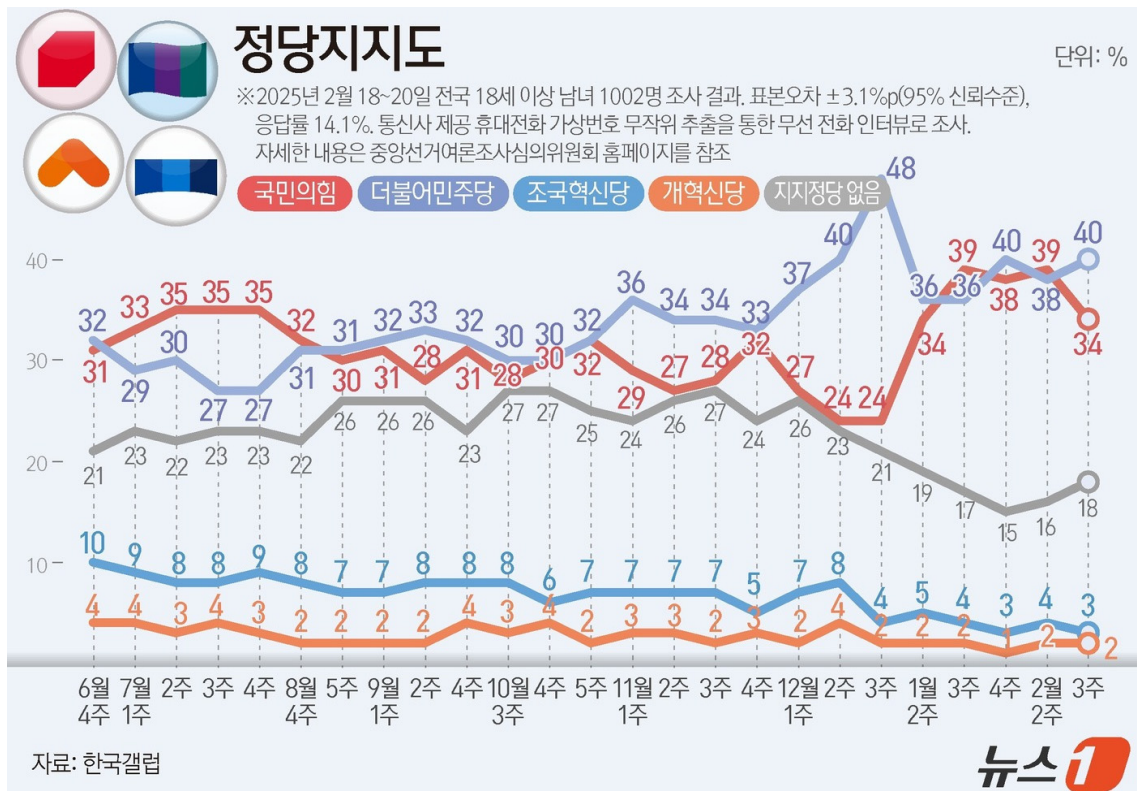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난 변태적 기회주의 극우파시즘은 전쟁도 마다 않고, 의회정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의 표적을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삼은 것이나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공격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시도한 것은 포스트파시즘을 넘어서 이미 파국으로 증명된 과거 파시즘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격변의 근현대 역사에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약간의 성찰이라도 진행하려는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 아닌, 기회주의적인 세력이기 때문이다. 근현대사를 통해 식민지 강점이나 전쟁 등의 역동적인 격난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세월을 통해 구축된 전통적인 자본 세력이나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와 계기를 통해 등장한 기회주의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하고자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특정한 종교적 영향력을 빌리기도 하고, 검찰 등 법적 지배력 행사를 적극화하면서 독재적 권력자로서 쉽게 유혹을 느끼는 파시즘적 행태를 자행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대자본도 매판과 독재에 기대어 기회주의적인 성장으로 시작했지만, 신흥 자본으로서 글로벌 자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과 성장, 규모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적 세력 구축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시도가 다른 정치적 기회주의세력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대자본은 현재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과거 파시즘과 현재 한국의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기득권세력이나 대자본이 아니기에, 크게 잃을 것이 없는 기회주의적인 극우파시즘 세력은 정치적 도박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를 독재와 전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따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대중들의 피와 땀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그들의 성과들을 자신들의 공으로 다 돌렸던 기회주의적인 정치세력들은 역사의 필연적 흐름인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 국제 사회의 다극화 흐름 등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구축한 지역적 연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불안을 부추기는 종교 세력과 연대하여 허구적인 선거 부정론 등의 가짜뉴스로 사회 불안을 더욱 조장하면서 ‘공산전체주의’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이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에 대항하는 최소주의적 선거연합

박근혜 탄핵 당시와 윤석열 탄핵 당시와 크게 다른 점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여권이 공천파동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현재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비록 여당 내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극우화된 여권 정치세력은 내란행위를 부정하면서 비교적 단결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탄핵 때는 논란의 사실을 증명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진행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내란 특검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여전히 비교적 높음에도 여야 지지율이 뒤집히기도 하는 변화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내란동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힘은 현재 국민의 30%라는 자신들에 대한 고정적 지지율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내란행위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가짜뉴스로 뭉치는 극우화되는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이것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탄핵정국 피로도 등을 활용하여 내란행위라는 엄중한 범죄에 대한 탄핵 단죄 공론에 대해서 여야 정쟁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에는 비교적 성공하였다. 하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의 현재 재판 변론으로 더욱 확고해진 국민 다수의 윤석열 탄핵 찬성 의견과 조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열망을 억누르지 못

할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단죄에 대한 여야 정쟁구도 구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과 내란 형사재판 진행 속에서 많은 것이 사실로 증명되면서 조기대선에서의 패배로 무너질 것이며, 민주정부 수립 이후 내란특검 등이 진행되면서 국힘의 완전한 몰락을 초래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은 여론조사에서 일시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박빙으로 만들 만큼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과거 파시즘에 대항하여 선거 및 집권연합을 형성할 때에는 이른바 진보세력부터 합리적 보수세력까지 모두 연대한다. 이속에서 선거공약은 여러 세력의 다양한 견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적 가치의 최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파시즘이 강할 때는 이러한 최소주의적 선거공약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선거집권연합이 대중의 여론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퇴행한다. 역사적으로 1936년 5월 프랑스 총선에서 반파시즘 민중전선이 승리하여 정부를 수립하여 반파시즘과 사회 개혁을 강령으로 제시하였고, 사회당과 급진당이 주된 세력을 이루었다. 당시 의회 다수 정당의 하나였던 공산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중전선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민중전선 정부는 주 5일제를 도입하였지만, 주 6일제로 후퇴하였고, 공산당을 불법화하였다. 결국 1940년 민중전선 정부는 독일의 침공 속에서 무너졌고, 민중전선이 지배하는 의회는 나치 시녀인 비시 정권의 수립을 찬성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되는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에 대해 선거연합을 한다면 3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 의제를 사회대협약 형태로 모두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진보세력의 힘이 강할 경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회대개혁 의제를 명확히 하면서 개혁주도 세력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기초해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보세력의 힘이 조직적으로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 등 사회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자 할 때 사회대개혁 의제가 모두 수용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나열식 사회대개혁 의제 제시보다 현실적이고 중점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다. 여러 세력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제보다는 복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최소주의적으로 중도적인 선거 공동공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국면처럼 광장에 수많은 대중들이 모였음에도 최소주의적 선거연대가 진행될 경우에는 진보세력 간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으며, 향후 중도적인 최소주의적 선거공약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후유증이 클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 주요 우선순위 의제를 제시하되, 사회대협약 같은 협력의 경우가 없더라도 극우파시즘 청산을 위해 민주정부 수립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기회주의적 극우 파시즘 세력을 먼저 청산하고, 민주정부를 설득하여 사회대개혁을 후순위로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세력 안에서 파시즘 척결을 우선적인 사회대개혁 과제로 처리하는 것에는 동의를 얻기가 쉬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대개혁 의제를 후순위 과제로 설정할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4.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서 광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파시즘의 정의는 “파시즘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나타난 대중정치와 대중동원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정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정치적 행동이자 체제를 가리킨다”로 언급된다. 결국 파시즘은 대중정치와 대중동원의 대중운동이다. 따라서 파시즘은 ‘거짓’을 ‘참’처럼 보이는 대중조작을 통해 대중을 현혹시키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과거의 폭력적인 파시즘과 달리 포스트 파시즘에 대한 선거 및 집권연대는 더욱 어렵다. 포스트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보다는 포퓰리즘과 국가주의를 더욱 내세우며 중산층 이하의 권력 상실과 경제적 위기의식을 증폭시켜 비난, 증오 등 감정적 연사와 차별의 논리를 강조한다. 핵심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 약속 등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으로 다가서는 포스트파시즘 세력에 맞서 과거의 기억만으로 공동의 위협으로 대하면서 여러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회개혁 과제를 모아서 공동의 선거공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반이민정서에 기초한 보호무역 등을 내세우며 정치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유럽의 극우정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생들을 학자금 부채의 포로로 전락시킨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같은 것도 유사한 사례이다.

하지만 현재 탄핵 국면을 초래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포스트 파시즘보다 과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퇴행적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반파시즘 연대가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무엇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엇에 대해 폄훼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찾으려는 한국의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 세력들에게 지나친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사회대개혁 과제의 선거공약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기회주의적인 극우파시즘에 맞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려면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같은 거대한 공동투쟁기구를 ‘사회대개혁 이행 촉구 연대기구’로 전환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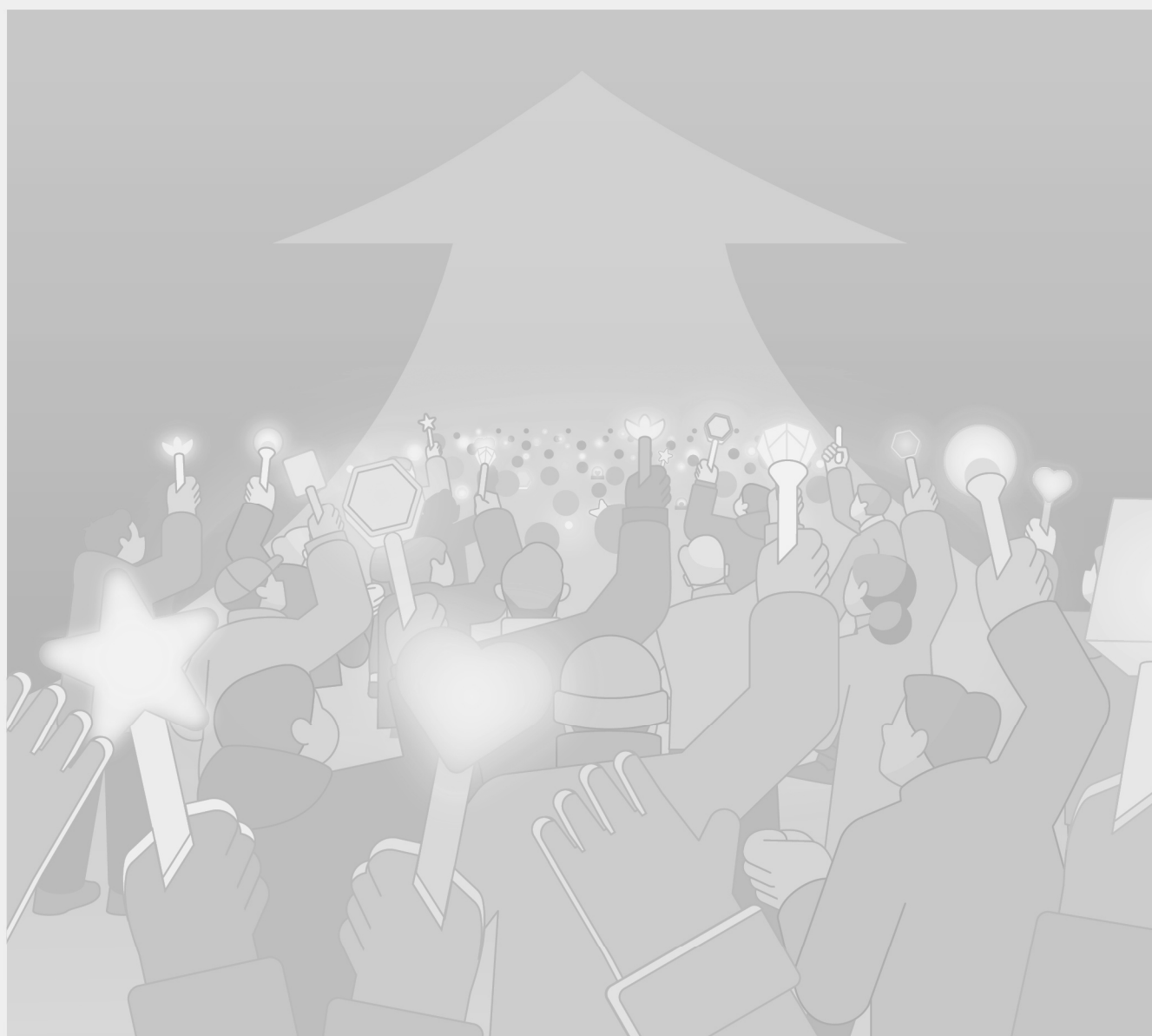
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우선 과제로 명확하게 내란세력 청산 등을 민주정부와 함께 실현하고, 이후 민주정부와 연대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 최소주의 또는 최대주의적 사회대협약을 맺거나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현대 유럽에서 포스트 파시즘에 대항하여 사회적 의제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거리에 모이는 파시스트보다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복잡한 정치적 고려 속에서 선거 및 집권 연합을 내오고, 공동의 공약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의제가 실종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수립한 민주정부에 파시즘세력보다 광장에 더 많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 요구안의 형태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사회대개혁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지름길이다. 결국 대중운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파시즘도 척결하고, 사회대개혁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토론

정 해 구 초빙교수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토론문

정 해 구 초빙교수(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1.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설문조사〉의 체계와 성격

1) 설문조사의 체계

-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별로 26개 세부주제를 선택하고, 대주제 12개 영역별(이하 12개 영역) 순위 확정. ※김귀옥 교수님 발표는 1차 설문조사의 12개 영역에 대한 분석임.
- 2차 설문조사를 통해 26개 세부과제 중 순위별로 11대 과제(이하 11대 과제) 선정(상위 순위별 10대 주제 + 특별주제 1).
- 15개 토론모임(이하 토론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 추출.

2) 설문조사의 성격

- 설문조사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의협의회(전민동)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진보적인 층의 일반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함.

2. 설문조사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

1)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 이 의제는 12개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1대 과제에서 4개 주제(①검찰 및 사법부 개혁, ②언론개혁, ④참여·숙의 민주주의 ⑥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대전환 의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의제가 부상한 원인으로서는 첫째 정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정치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정치의 사법화’) 한편 이를 계기로 검찰 등의

정치 개입(‘사법의 정치화’), 즉 ‘사법정치’의 부상, 둘째 분단 한국의 이념적 갈등을 동원하여 야당과 국민의 상당 부분을 ‘좌경’ 또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보수 언론 및 극우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의 왜곡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법과 정치의 분리, 기소와 수사의 분리 등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토록 해야 함. 또한 정치, 행정, 사법, 언론에서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시민 감시와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안법 문제(11대 주제 중⑥)가 새삼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에 따른 우려 때문이 아닌가 함.
- 한편 각종 정치제도(선거제도, 지방분권, 대통령제 등)에 대한 지지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절차가 쉽지 않고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외교·안보·평화

- 이 의제는 12대 영역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 특히 남북협력, 한일관계 재정립, 균형외교 등이 중시됨. 11대 과제에서 남북협력은 ③위의 순위를 기록하며 그 대책으로서 남북 화해 및 교류협력 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최근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급변, 북러동맹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 및 한미일 연대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국제질서 급변과 윤석열 정부의 편향 외교 속에서 우리의 외교·안보·평화 정책과 대북정책은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긴장 방지와 평화의 강화, 안보와 통상에서 가치 외교와 국익 외교의 균형 모색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대외 정책 재정립에 있어 국제적 갈등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국내 정치적 유혹과 자극(특히 정당과 언론 등)을 제어하는 것 또한 필요함 (예: 과도한 협중 정서)

3) 경제개혁·민생·부동산

- 경제개혁·민생·부동산의 의제는 12대 영역에서는 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이 영역에서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는 대기업 중심 경제, 주거·부동산 문제 등 계속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주거 문제와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젊은 층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그들이 그 주요 피해 당사자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상은 경제정책에 있어 소득과 자산 불평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층과 젊은층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4) 노동·일자리

- 노동·일자리 의제는 12대 영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대 과제에서 고용·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주제는 ⑦위를 차지하고 있음.
-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 등 노동 취약층에 대한 대책과 그들의 활동 보호 및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여성과 낮은 연령층이, 경력단절 및 노동시간 대책·유연근무제 등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평등 속에서 주로 노동 취약층인 여성, 비정규직 등이 보호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5) 교육 등 기타 사회정책

- 12대 영역에서 교육은 7위, 저출생·고령화는 8위, 보건·의료·안전은 9위, 농업·먹거리는 10위, 과학·기술·학문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대 과제에서는 교육개혁이 ⑧위를, 역사정의가 ⑨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개혁의 강조점은 좋은 시민 양성을 위한 보편 교육, 역사교육 등에 방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는 지위 상승을 위한 초경쟁의 우리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과 젊은층의 관심이 큼.
- 저출생 고령화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성과 젊은층의 관심이 높음.
- 보건·의료·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격차 해소, 사회적 재난 국가책임제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음.
- 농업·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지역 소멸을 위시하여 농어민 보호 대책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과학·기술·학문과 관련해서는 R&D 정책 혁신을 비롯하여 점차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6) 사회적 불평등(혐오·차별·성평등 등)

- 혐오·차별·성평등 등의 사회적 불평등 의제는 12대 영역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11대 과제에서는 특별과제로서 채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관심이, 차별금지 및 혐오금지 제도,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 문화다양성 존중에 대해서는 여성과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토론모임에서는 이 의제들에 대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차별 철폐,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7) 기후·환경

- 이 의제는 12대 영역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대 과제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론모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RE100을 위한 송전망 문제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 시도 속에서 에너지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선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송전 정책에 대한 전환적 대책이 필요함.
- 흥미로운 것은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탈산업화의 지향을 보인다는 점임.

3. 종합 논평

1)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선 과제

- 정치: ‘사법정치’(‘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해결, 기소와 수사의 분리, 극우 포퓰리즘 정치 배제, 국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 등.
- 대외정책: 한반도 긴장 방지와 평화 구축, 가치-국익 균형 정책 등.
- 경제·노동정책: 경제민주화, (젊은층과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주거·부동산 대책 및

부채 대책,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층과 여성을 위한 대책 등.

- 사회정책: 경쟁교육 완화와 보편적 시민교육,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보건·의료·안전에 관한 공공성 제고, 지방소멸 방지와 농어민 보호,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기후·환경정책: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송전망 설치 등.
- 혐오·차별·성평등 등 사회적 불평등: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차별 금지, 성평등 교육 강화 등.

2) 이러한 과제를 누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이와 관련하여 이창희 박사님은

- ① 현재 우리나라의 파시즘을 과거의 폭력적 파시즘과 구별되는 기회주의적 포스트 파시즘으로 규정하면서 나름의 지지 기반을 갖고 선거 승리를 도모하는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 최소주의적 선거연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 ② 따라서 최소주의적 선거연합을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광장의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민주정부로 하여금 사회대개혁을 실현토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음.

- ① 극우세력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최소주의 연합으로서 ‘민주헌정수호연합’의 결성, 여기에 시민사회세력은 연합의 한 축으로 참여.
- ②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세력은 연합 공약에 광장 시민들의 주요 요구를 반영시키면서* 향후 수립된 민주정부 하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연합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위에서 살펴보듯이 광장 시민들의 요구는 그리 급진적이지 않으며, 오늘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요구들임. 즉 최대주의 공약이 아님(단,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대선의 논란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③ 대선과 그 이후 과정에서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세력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④ 이후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그 정부가 연합정부 형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세력은 외부의 건전한 조력자 또는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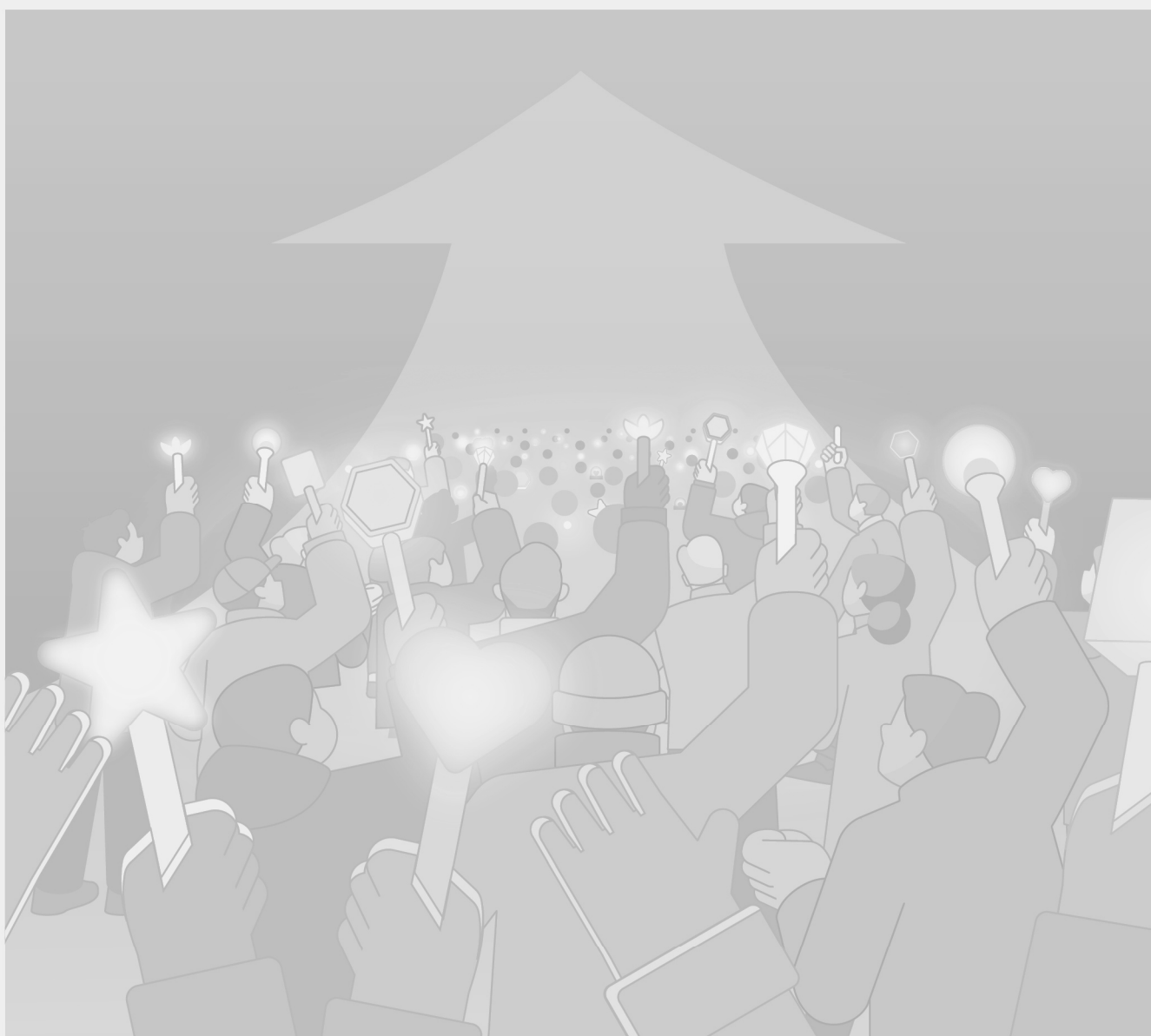
- 요컨대, 시민사회세력은 극우 파시즘세력에 대항하는 ‘민주헌정수호연합’ 결성과 이에 바탕을 둔 향후 연합정치 추진을 주선하고 지원하지만, 그럼에도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의 한 주자(play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토론

서복경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민동’ 회원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1. 데이터의 성격

- ‘전민동’ 회원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 베이비붐세대 고학력자 중 진보적 사회참여층의 시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
- 한국 베이비붐세대는,
 - 통계청 기준 1955~1963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62~70세 연령층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 ‘이전과 이후 연령층과 비교해 출생자 수가 급증한 연령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1955~1974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51~70세 연령층을 지칭 1955~1964년 전기와 1965~1974년 후기로 구분(김태현, 2010)
 - 이하 토론문에서는 1955~1974년 기준으로 사용,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2025년 현재 만 61~70세, 후기 베이비붐 세대는 만 51~60세에 해당
- 본 조사 모집단은 ‘전국대학민주동문회대표자협의회’(이하 ‘전민동’), ‘전민동’은 1990년 최초 결성되었고 대학별 활동 회원 연령층을 고려하면 대략 한국 베이비붐 세대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
- 조사 응답자는 ‘전민동’ 회원 가운데 ‘총회나 모임 참석 등 열성회원’일 가능성
 - 현재 ‘전민동’ 회비를 내는 회원은 대략 8천여 명, 열성회원은 1,600여 명(김귀옥, 각주3)
 - 조사결과표 상 응답자 연령분포는 40~50대 43%, 60대 이상 44%로 표기되어 있으나(김귀옥, <표1>), 활동회원 연령층을 추정해 볼 때 50~60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
- 응답자의 최종 학력 기준 대학 졸업 이상이 90%, 그중 대학원 이상 학력이 37%를 차지

- 전기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연령층인 1964년생은 1983년 대학 입학, 1983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3%
- 후기 베이비붐세대 마지막 연령층인 1974년생은 1993년 대학 입학, 1993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7.1%(「교육기본통계」)
- 응답자들은 한국사회 동년배 기준 고학력층 집단으로 구성
- 응답자 중 거주지 기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가 64%를 구성
 - 해당 연령층이 대학 진학을 할 때 대학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 압도적으로 분포
 -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 서울 및 수도권에서 경제활동을 한 이후 지속 거주자가 다수로 추정
- 총응답자 중 75.5%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집회에 자주 혹은 간혹 참여하는 사회참여층
 - '12.3 내란'에 비판적이면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진보적 사회참여층
 - '12.3 내란'에 동조적인 입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주 연령층도 베이비붐 세대,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보수적 혹은 극우적 사회참여층으로 구분

2. '사회대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는 '사회대개혁' 내용에서 인식 범위의 포괄성, '사회대개혁' 추진방법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개방성이 돋보임(김귀옥, <그림2>; 21~26).
-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 조사대상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조사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 현 사태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고 '12.3내란'은 결국 정치와 언론이 오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존재
- '경제개혁·민생·부동산'이 2위를 차지하는 것 역시 전체 시민 조사에서도 유사할 것, 정치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
- 주목되는 지점은 외교안보 및 평화, 기후환경, 노동·일자리, 혐오·차별·성평등에 대한 중요도나 시급성 인식이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는 점임.
 - 특히 기후환경 문제나 성평등, 혐오나 차별금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전통적 의제 영역인 외교안보나 일자리 영역에 대한 인식과 견주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사회변화 의제영역의 다양성 인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 사회개혁 방법론 관련 주관식 답변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다수의 참여, 다양성 존중, 다양한 세대나 직업, 소득, 자산 집단의 참여와 고려, 현장의 목소리 반영, 공론의 장, 숙의를 통한 대안 도출’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본 조사 응답자가 베이비붐 세대 연령층의 수도권 기반 고학력자를 특성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정의 개방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12.3 내란’ 이후 한국정치에서 베이비붐 세대 진보적 사회참여 집단의 역할

- 한국사회 전기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61~70세)는 청년기에 ‘박정희 유신’ 쿠데타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의 경험을 가진 세대
- 후기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51~60세)는 신군부 체제에서 민주화 국면으로 이행하던 시기, 민주화 이후 초기 국면에서 청년기 경험을 가진 세대
- 2024년 기준 유권자의 연령집단별 비중은, 50대 19.9% > 60대 17.8% > 40대 17.4% > 18~29세 15.5% > 30대 14.4% 순으로, 50~60대 유권자가 총유권자의 37.7%를 차지.
 - 2020년 50대 19.5%, 60대 14.8%로 4년 사이 50대는 19.9%로, 60대는 17.8%로 증가했으며, 향후 20여 년간 이 연령집단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
- 2022년 대선 기준 60대 투표율은 87.6%, 50대 81.4%로 총투표율 77.1%를 크게 상회
 - 2024년 총선 기준으로도 60대 투표율 82.0%, 50대 71.6%로 총투표율 67.0%를 상회
- 연령별 투표율로만 보면 2022년 대선 70대 투표율은 86.2%, 2024년 총선 70대 투표율은 84.7%로, 70대가 10세 구간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부터 향후 20여 년 동안 인구 비중도 압도적이면서 정치참여도 가장 높은 집단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이 세대의 정치적 의견에 따라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가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

〈표 1〉 연령별 탄핵 찬반 의견(2025년 2월 4주 기준)

질문)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입니다.

귀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모름/ 응답거절
2024년 12월 2주(10~12일)	1,002	1,002	75%	21%	4%
2025년 1월 2주(7~9일)	1,004	1,004	64%	32%	4%
1월 3주(14~16일)	1,001	1,001	57%	36%	7%
1월 4주(21~23일)	1,000	1,000	59%	36%	6%
2월 2주(11~13일)	1,004	1,004	57%	38%	4%
2월 3주(18~20일)	1,002	1,002	60%	34%	6%
2월 4주(25~27일)	1,000	1,000	59%	35%	5%
연령별					
18~29세	141	154	71%	20%	9%
30대	152	149	62%	30%	7%
40대	169	174	73%	25%	2%
50대	196	196	67%	30%	3%
60대	185	177	48%	49%	3%
70대 이상	157	148	33%	58%	9%
성향별					
보수	340	339	27%	71%	2%
중도	300	303	70%	23%	7%
진보	261	260	92%	6%	2%
모름/응답거절	99	99	54%	26%	20%

※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2025년 2월 4주

-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적 의견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가늠하기 어렵고, 세대 내 갈등 폭이 큰 세대로 존재
 - 갤럽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월 4주 기준 50대 중 윤석열 탄핵 찬성 67%, 반대 30%지만 60대는 찬성 48%, 반대 49%로 분포
 - 현재 50대는 40대와 유사한 의견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60대는 5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의 중간 정도 의견으로 분포
- 현재 60대는 ‘12.3 내란’ 이후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극우적 선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024년 12월 2주 기준 60대의 탄핵 찬성 의견은 60%였지만 2025년 2월 4주 기준 48%로 감소하여 12%의 의견 변화를 보임¹⁾.
- ‘12.3 내란’ 및 탄핵에 대한 태도에서 안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50대와는 달리 60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탄핵 결정 수용 정도, 조기 대선 캠페인 기간 내란 및 탄핵에 대한 의견 변화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 사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각 연령층 및 전체 유권자 집단의 의견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움. 2024년 12월 2주차 조사에서는 진보층이 과표집되어 있었고 2025년 2월 4주차 조사에서는 보수층이 과표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 기준 의견 분포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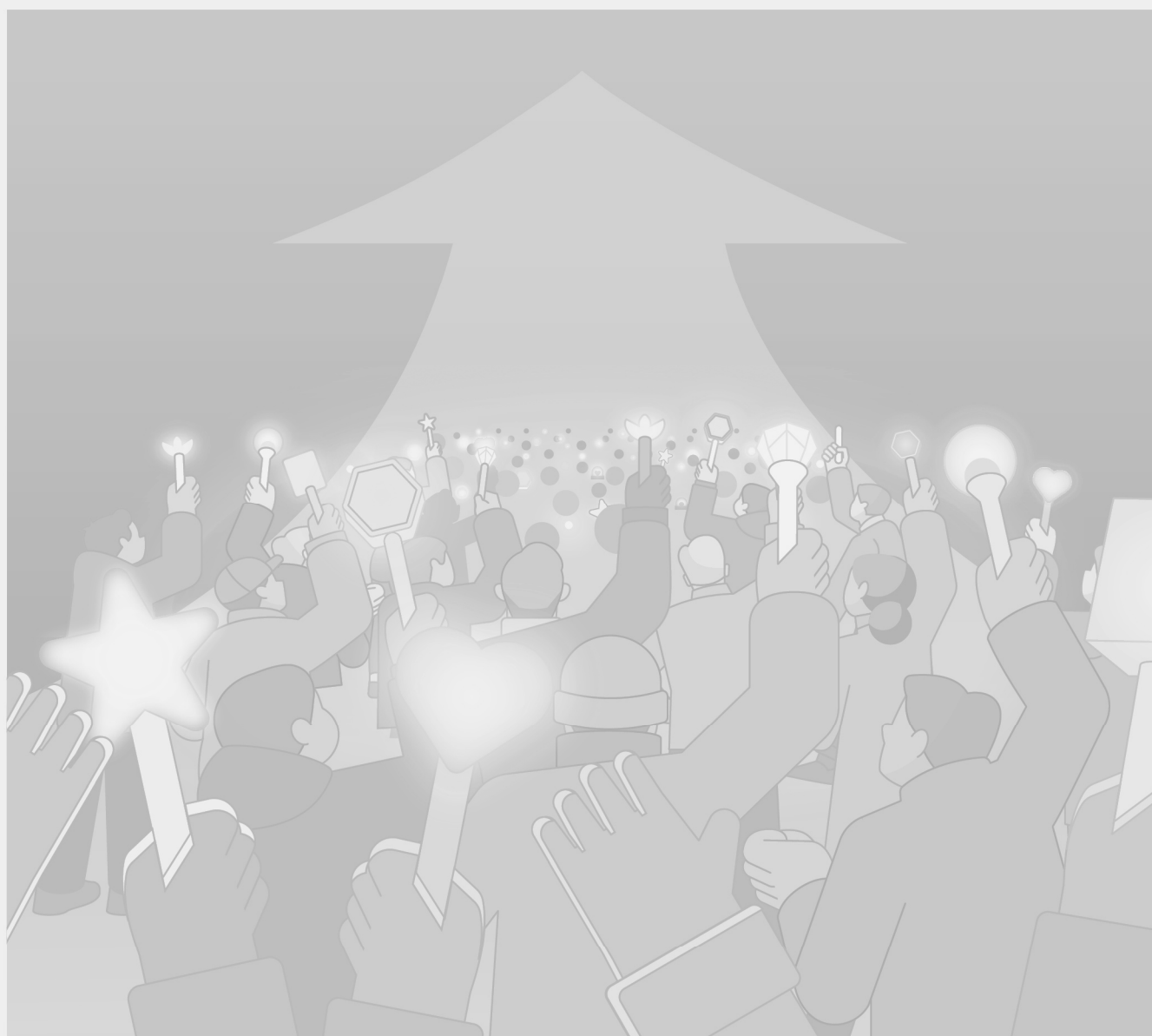
- 현재 상황을 둘러싼 단기적 의견 변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
- 이런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 진보적 사회참여층의 의견 및 활동이 세대 내 소수 의견이 아니라 다수 의견으로 조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 특히 세대 내 극우적 의견집단의 활동이 종교, 금융이나 소비 등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협회나 주민단체, 읍면동이나 구시군과 연계된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진보적 사회참여층의 능동적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됨.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토론

윤영상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윤영상 교수(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1.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한국사회 대전환 과제

한국사회대전환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등장하였다. 논자에 따라 초점과 범위가 다르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보편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복합위기의 도래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사회의 대전환도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AI기술과 과학기술혁명이 만들어낸 경제상황, 일자리와 노동, 복지와 돌봄의 위기는 전세계적 차원의 복합위기, 보편적인 위기의 상징이었고, 지구정치, 국제정치의 협력과 진전이 없다면 비관적인 미래, 절망의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정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치, 세계정치를 선도하는 선진국들, 강대국들의 복잡한 내부정치의 부각과 극단화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서 부각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갈등과 결부되어 국제정치, 세계정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복합위기에 70여년이 넘는 전쟁질서와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극단적인 내부정치가 더해져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다.¹⁾ 학계, 시민사회운동에서조차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한국사회의 메인스트림은 그런 문제제기를 당연한 시대의 유행처럼 간주할 뿐이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2017년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은 전면화되지 못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 한류의 성공 등으로 국민적 도취상황이 존재하

1) 윤영상, “복합위기시대의 정치, 희망과 절망의 변주곡” 『시그널 코리아 2025』 (주)광문각출판미디어.

기도 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목을 잡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 정치 배제, 개헌 실패, 롤러코스터를 탔던 남북관계, 부동산정책 실패, 검찰개혁 좌절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 실패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2010년 전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 본격화되었던 극우세력의 준동 역시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걱정스러웠지만,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정치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는 종북세력 혐오로 무장한 극우세력과 기후위기, 복지, 노동, 평화를 염원하는 진보세력들 사이에 서만 강세를 나타냈을 뿐이었다.

12.3 윤석열의 내란사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사실 2022년 윤석열 검찰정부의 등장과 폭주과정은 그 예고편이었다. 검찰독재, 무속정치, 극우세력 낙하산인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경제와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던 87년 민주개혁의 성과들은 곳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조차 견디기 힘들다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선포’가능성을 우려했을 때 보수언론만이 아니라 진보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조차 비웃었다. 35년이 넘는 민주화의 성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낙관과 자부심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12.3 윤석열에 의한 내란사태는 그런 낙관과 자부심의 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한국사회가 자랑해 마지않았던 민주주의의 기반이 너무도 허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친일, 친독재세력이 남아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극우세력이 수구세력과 뒤섞여 재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일부 군인들, 반동적 인사들만 처벌하면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극복과 사회대전환 과제는 바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말해주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2. 윤석열 내란사태의 실체와 정치적 고려사항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의 표면적 주동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김용현 등 일부 시대착오적인 군인과 관료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겉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끝까지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권

한대행체제가 지금 정부의 실체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진보세력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과 극우정당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겉으로는 비상계엄 반대를 외치면서도 민주당 집권을 두려워하고, 극우집회를 독려하고 있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의 힘은 여전하며, 극우 유튜버들은 그 위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세력이 일으킨 것이다.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권력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기득권세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친위쿠데타의 표면적 주역만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등 처벌될 수밖에 없는 친위쿠데타 주역들은 사실 거대한 기득권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력기반을 다지고, 조직을 확대시키며, 여론을 선동한다.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등 극우기독교세력, 국민의힘내 다양한 분파들,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과 극우 유튜버들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등 내란주역들이 처벌되고,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존재들이다. 윤석열만 파면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딛고 있는 토대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아마도 윤석열이 사라지더라도, 그들은 재집권을 꿈꾸고, 또 민주당 정부가 출현하더라도 그 다음 정부를 장악하려고 기를 쓸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이미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한국의 극우세력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친일, 반공, 친독재를 기반으로 한 극우 보수층이 20% 이상 존재하고 있는 사회이다.²⁾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는 극우적 성향을 단순히 수구 반동세력의 잔재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그 속에는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취업의 위기, 빈곤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의식 흐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연대하고, 세력화하고 있으며, 민주적 공론장을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미 그들도 광장이 자신들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세력 확장의 도구이자 새로운 광장과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2)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와 김종필 후보의 득표율 합은 44.7%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후보의 득표율 합은 52.23%였다. 이들 중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합리적 보수층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한국의 극우세력이 전체 유권자들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평가는 큰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월 6일 NBS 여론조사에서 탄핵 기각 의견이 38%라는 결과도 그런 현실의 표현이다.

미국의 극우, 유럽의 극우들한테서 배우고 그들의 슬로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응원 봉 집회의 행동양식을 따라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진보정치 세력은 붕괴되었다.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한다. 조국혁신당은 성공적으로 등장했으나 민주당으로 통합될 것인지, 혁신 진보의 공간을 창출할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다. 과연 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거대정당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한편 지금 우리는 극우정 치세력의 전성시대를 직관하고 있다. 이미 광장의 극우는 과잉 대표되었다고 할 정도로 커져 있다. 이제 그 이름도 헛갈릴 극우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보수세력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의 미래다. 이미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등 윤석열 탄핵찬성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소수파로 전락했다. 겉으로 탄핵찬성이지만 사실상 탄핵반대파인 오세훈이 현재 결정과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놓고 탄핵반대를 선동하는 김문수도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고 있다.

3. 광장시민들의 요구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길

12.3 내란사태를 저지시킨 것은 민주시민들이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결의를 가능케 만들었다. 탄핵소추과정에서 여의도 전역을 뒤덮었던 광장의 시민들은 사실 전국각지에서 올라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 없던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태령, 한남동의 시민들의 모습은 그 상징적 모습이였다. 그러나 광장의 목소리는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요구와 특수한 주장들을 균형있게 바라보는 것이다.

한국사회 대전환의제 공론화 1차, 2차 설문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조사와 토론은 광장의 모든 시민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광장시민들을 대표하는 표본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광장의 한쪽을 지켰던 전국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약칭 전민동)’의 구성원들과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조사이고,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사와 토론의 한계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위 조사와 토론결과에 대한 김귀옥, 이창희 두분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강조하거나 보완, 비판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1987년 헌정체제로부터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이다. ‘아주’, ‘다소’를 포함해 96%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장에 적극 참여하는 세력이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치이다. 물론 그렇다고 광장의 시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제는 그 간극을 어떻게 구별하고 채워넣을까이다. 이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1차 조사 707명이 우선순위로 잡았던 3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정치 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가중 합계 1650), 2) 경제개혁·민생·부동산(591), 3)외교·안보·평화(358)가 바로 그것이다. 707명은 광장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보통 시민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우선 순위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3)외교·안보·평화(358)를 놓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정치현실상 그 정도의 비중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과 윤석열 내란에서 북한을 이용하려 했던 상황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마 다른 측면의 조사들까지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1) 내란종식과 재발방지, 2)경제위기와 민생, 3) 평화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보편적 요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요구는 시급한 요구이며, 탄핵결정후 조기대선의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정책변화, 헌법개정 및 법률개정과 관련해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논의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4)혐오·차별·성평등(338), 5)노동·일자리(324), 6) 기후·환경(313)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론조사나 토론결과 등을 검토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탄핵결정후 조기 대선국면에서 자칫 1)-3)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대선에서 4)-6)을 어떻게 의제화시킬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 진보개혁정당들이 4)-6)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개혁정당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의제화가 필요해 보인다.

4.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정치개혁

이번 공론화조사 및 토론결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란종식과 정치개혁의 과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내란 직후 거의 80%에 이르렀던 내란반대, 탄핵찬성 여론이 지금은 55-60%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여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바로 개헌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개헌문제는 중요하게 거론된 바 있다.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 12.3 쿠데타 이전부터 개헌문제는 정치적으로 많이 오염되었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개헌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개헌을 얘기했고, 내란종식 헌정수호를 말하는 사람들도 개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후 개헌의지를 피력한 것은 개헌 논의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탄핵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대선에서 개헌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그 논의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이다. 선거당락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개헌문제가 논란은 무성한데, 실질적 효과가 없는 상태로 전략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와 같은 권력구조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의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약속해서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내란종식과 재발방지만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헌문제가 사회대전환의 핵심의제여야 한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사회 대전환은 헌법개정이나 법률개폐와 같은 제도변화만이 아니라 정치세력의 교체와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대전환은 사실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제도를 옹호하는 기반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후보 선택의 제 1차적 기준은 내란반대, 민주공화국 옹호가 되어야 한다. 아마 이와 관련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옹호 후보가 될지, 무늬만 내란반대 실질적으로는 내란옹호 후보가 될 것인지, 실질적인 내란반대 후보가 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현실상 겉으로는 내란을 반대한다면서 내란옹호 세력,

극우세력의 숙주노릇을 자임하는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극우세력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쩌면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떻게 극우세력을 상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일시적으로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극우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극우를 견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세력의 육성에 특별히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붕괴된 진보세력의 재건도 그 속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국정치세력의 새로운 판짜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정당법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정치적 새판짜기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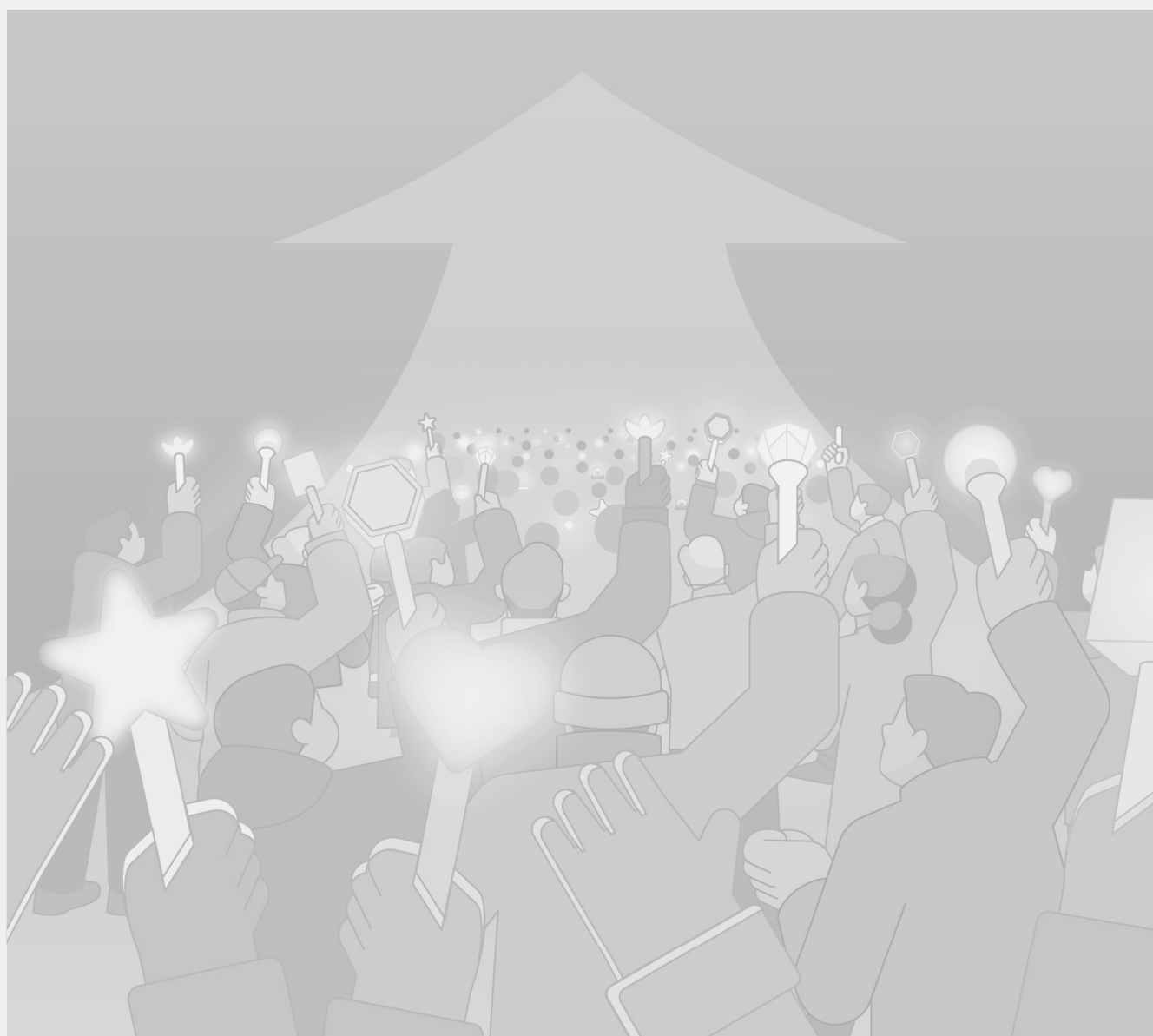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경쟁하면서 극우세력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극우세력이 보수세력의 주류가 되고, 민주당내 주류와 합리적 보수가 통합되고 새로운 진보세력이 부각되는 프랑크식 정치변화가 한국에서도 시작될 것인가?

과연 내란사태 반대 헌정수호 단일후보는 가능한가?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의 연합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확히 현재의 정치구도를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진보개혁정당들이나 시민사회운동이다. 어떻게 해야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진보세력의 대중적 입지를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토론

박 혁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극우파시즘 세력에 맞선 압도적 다수의 연대를 위해

박 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우리는 서로 1등을 하려고 선의의 경쟁을 했지만
총칼을 갖고는 하지 않았다.”

김대중

3당 합당의 기억

1990년 신년 벽두에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3당이 합당했다. 의도는 분명했다. 평민당을 호남당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념적 고립을 통한 세력의 고립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보혁구도를 만들려고 했다. 보혁구도의 핵심은 자신들은 광범위한 보수대연합으로 확장하고, 평민당은 주변부의 왜소한 혁신세력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군부쿠데타세력과 친일세력, 냉전수구세력이 보수로 신분세탁을 하는 순간이었고 민주당세력을 혁신세력으로 고립시키려는 순간이었다. 당시 그들은 보수와 혁신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그 뒤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종교적 신앙과 전통적 윤리도덕을 존중하는 것. 자유진영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화에 동조하는 것, 자유경쟁체제에 바탕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신봉하는 것.’(보수)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그 뒤 발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종교적 신앙과 전통적 윤리도덕에 대한 회의적 태도, 현재의 체제가 노동자 · 농민 · 소시민의 희생으로 유지된다고 보는 시각. 미국 · 일본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혁신)

평민당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도민주연합의 길로 갔다. 당 내부에서도 혁신세력의

길로 가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김대중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혁신의 구도를 세우려는 것은 시대변화를 외면한 무리한 사고”라며 중산층 서민대중 노동자 농민을 모두 포용하는 중도통합을 강조했다.

중도정당의 길을 걸어 온 민주당

민주당은 늘 중도정당이었다. 중도정당은 시대의 나침반이다. 시대정신과 시대상황에 조응하고 반응하며 자신의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찾는데 치열했다. 변혁과 개혁의 시대에는 진보세력과 손을 잡았고, 저항과 교체의 시기에는 보수와도 손을 잡았다. 민주당의 바늘은 시대에 흔들리고 반응했지만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민복이라는 방향은 결코 잃지 않는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었고 국민의 희망이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반독재 민주화를 이끌었다. 연합과 연대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도정당, 민주당의 필수불가결한 생존방식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발제자(이창희 교수)가 언급했듯이 세 가지 연대방식 중 세 번째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를 바란다. 첫째, 둘째는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며 현 시국에서 민주당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은 흔들리는 나라, 붕괴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극우파시즘의 득세에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임을 증명해야만 극우파시즘 세력을 고립시키고 차기 정권에서 개혁과 변화의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상식적 국민과의 최대한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대협약 같은 협력의 경우가 없더라도 극우파시즘 청산을 위해 민주정부 수립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기회주의적 극우 파시즘 세력을 먼저 청산하고, 민주정부를 설득하여 사회대개혁을 후순위로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방어, 헌법가치 수호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

현 시점에서 무엇이 중한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개별 의제에 앞서 제도와 시스템 복원,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구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목

표를 다시 재확인해야 한다.

극우파시즘 세력은 피로 이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달려들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급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대통령 계엄령 시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및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극우화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 체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옹호하는 세력들의 정신세계다. 국힘이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다. 그러한 국힘의 행태는 이념적 고립이나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 일본 자민당처럼 여러 계파를 거느린 거대 보수 정당으로 발전”하려는 뿌리 깊은 시도다. 지금의 위기는 소수의 극우화가 아니라 보수로 포장해 자신을 숨기며 세력을 키워 온 친일독재냉전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유럽의 극우화와는 구별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가령 독일의 기민당이나 기사당 등 보수정당은 극우당인 AfD와 절대 연정을 하지 않으며 선을 긋는다. 상대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발제자가 제시한 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탄핵 국면을 초래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포스트 파시즘보다 과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퇴행적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반파시즘 연대가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무엇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엇에 대해 폄훼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찾으려는 한국의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 세력들에게 지나친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사회대개혁 과제의 선거공약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사회대개혁의 우선 과제로 명확하게 내란세력 청산 등을 민주정부와 함께 실현하고, 이후 민주정부와 연대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 최소주의 또는 최대주의적 사회대협약을 맺거나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정권교체 이후 ‘더 강한 민주주의’로 국가대개혁 나서야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문제는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자들에 대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로 완강하게 맞서야 한다. 내란범을 지키려고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는 시대다. 더 많은 대중의 힘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제도화해 반민주적 행태가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회 대전환의 1순위로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이 꼽힌 것은 의미가 크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개혁과제로 숙의민주주의 강화, 선거제도 강화 등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원주의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통하여 대타협을 이루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공론화 숙의 과정에 온 국민이 참여하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지혜를 구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함. 그로 인해 정책제안 그리고 이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함.”

〈참조〉

갈등의 숙의적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필요

○ 공론화를 통한 국민참여 강화와 대의제 혁신

- 공론화(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일반 시민간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치적 평등, 비독재성, 토의를 특징으로 함
-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소수 엘리트정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다수독재의 위험과 숙의결핍 등을 보완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 쌍방향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적 의사확인이 가능하고 토론 속에서 의사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새로운 사회적 합의 가능성 증대
-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어 대중의 참여와 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서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

〈공론화의 원리와 특징〉

대표성	여론조사를 통한 피상적 선호의 취합이 아니라 쌍방향적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이 형성한 의사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적 의사확인 가능
타협성	학습과 토론의 과정에서 의사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최종결과가 본인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서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짐
평등성	모든 국민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동등하고, 주어진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의 선호가 동등하게 고려되고, 자신의 선호를 충분히 형성할 기회가 동등함
공공성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적 의견과 이해를 넘어 공론을 형성하게 됨
수용성	어떤 결정이라도 자신이 함께 참여하여 숙의와 타협을 통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음
효율성	소통과 토론,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정당성이 높아져 갈등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짐

○ 숙의적 의사결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필요

- 정치적 양극화가 전례 없는 상황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숙의과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결핍을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요구가 높음

○ 헌법 개정 공론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헌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랜덤하게(무작위로) 참여하고 심의, 숙의할 수 있는 원탁 토론을 만들자고 야당에 제의한 바 있다"며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으므로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다"고 밝혔다(2017.12.11.).
- "국민 참여에 기초하는 열린 논의구조를 새로이 도입하여 교착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준하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 개헌작업을 실행해야 한다."(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2017.10.31.)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마친 후 여론조사에서 공론조사와 같은 숙의민주주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5% 였음(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갤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인식조사보고서」, 2017)
-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83.2%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과정에서 활용한 ‘공론조사 확대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72.7%가 공론조사를 시행·관리하는 ‘기구 상설화’에 대해 찬성함(세계일보, 2017.10.30.)
- 공론화 등 다양한 방식의 숙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상설기구를 만들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해 공론화의 주체, 대상과 범위, 방법, 과정 등을 규정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들〉

법안명	제안일자	제안자	의결결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5.05	정부	임기만료폐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2009.06	임두성	임기만료폐기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2010.07	권택기	임기만료폐기
국가공론위원회법안	2012.08	김동완	임기만료폐기
국책사업국민토론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3.02	부좌현	임기만료폐기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12	김태호	임기만료폐기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	박정	임기만료폐기

-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갈등조정기관인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해 프랑스의 사례처럼 조직, 운영, 예산이 독립적인 독립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개별적 갈등사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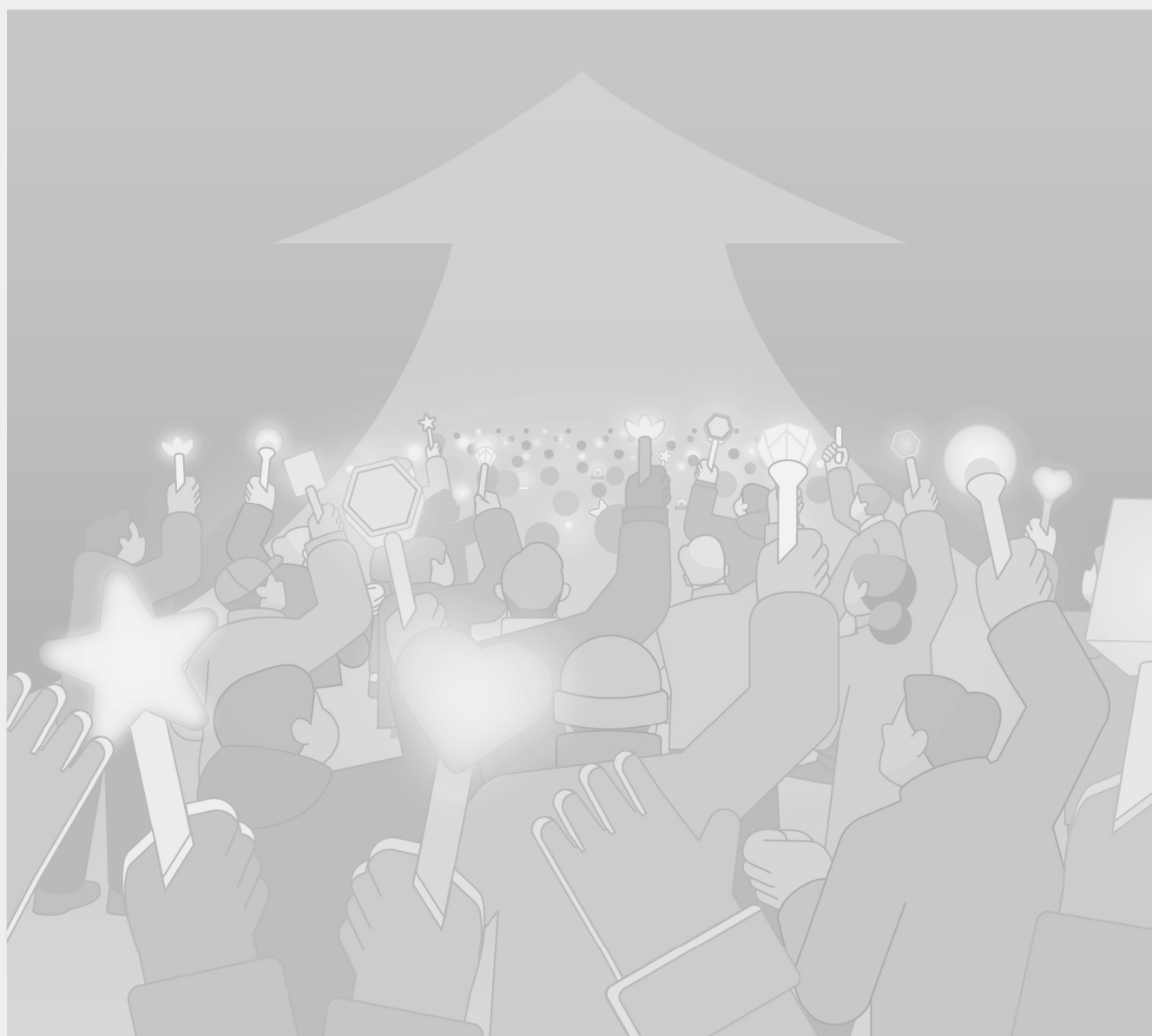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 이하 CNDP)

성격	•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공공갈등사전 예방기구
목적	• 중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지거나, 환경 또는 국토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토개발 사업 및 설비사업의 전반을 감독하며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목적, 적정성, 특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공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 것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총 21명의 위원들(상설) • 사무국(상설) • 공공토론특별위원회 (Conseil Particulier du Debat Public, CPDP) (임시)
역할	• CNDP가 해당사안에 대해 공공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CNDP 위원장이 CPDP 의장을 임명하여 CPDP 구성 • 구성 후 약 4개월 간 공공토론을 벌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CNDP에 전달 • CNDP 위원장은 공공토론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사업자에게도 전달 • 사업자는 공공토론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표
성과	• 공공토론에 부처진 사업 계획 가운데 약 80%가 원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 •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공공토론에 부처진 37건 중 공공토론을 통해 제시된 대안을 선택한 경우가 15건, 사업을 수정한 경우가 11건, 원안을 그대로 추진한 경우가 7건,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4건으로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가 약 80%에 이룸 • 공공토론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부 록



[부록1: 설문지]

No.	조사일	2025년	월	일
<p>존경하는 선생님께,</p> <p>2024년 비상계엄 내란정국의 짙은 어둠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p> <p>2025년 아직은 민주화로 가는 신새벽이지만, 시민들과 굳건히 잡은 연대의 손들이 있기에 머지않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높이 든 시민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인내심으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발휘하여 마비된 국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p> <p>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1987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난관을 넘어서고 낡은 체제를 벗어내어 마침내 우리 후손들과 <다시 만난 세계>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내어 한국 사회 전환시킬 비전과 의제를 함께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p> <p>바쁘신 중에도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개인 신상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며,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의 날을 모색하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1월 22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회 (응답과정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justpul6@gmail.com)</p>				

☐ 다음을 읽고 선생님의 생각에 가까운 답에 ‘○’이나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2024년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평범한 일상, 민주주의와 국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집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집회나 시위, 관련 다양한 온/오프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 ①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
- ② 간혹 참여하는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별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
- ⑤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

주요 영역	
①정치개혁·민주주의	
②경제개혁·민생	
③외교·안보·평화	
④기후·환경	
⑤노동·일자리	
⑥농업·먹거리	
⑦교육	
⑧혐오·차별·성평등	
⑨보건·의료·안전	
⑩저출생·고령화	
⑪과학기술	
⑫기 타 ()	자유 기입 후 순위에 올려도 됩니다.

5.다음은 사회 대전환을 위하여 필요로 되는 구체적 항목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필요의 정도에 따라 ‘○’이나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정치개혁 및 민주주의’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5-1	대통령제(4년중임)					
5-2	선거제도(결선투표제, 비례성·다양성 확대)					
5-3	언론개혁					
5-4	검찰 및 사법부 개혁					
5-5	지방분권					
5-6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5-7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5-8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5-9	기타					

6.‘경제개혁 및 민생’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6-1	물가안정(공공요금 등)					

6-2	주거안정(공공주택 등)					
6-3	가계·중소상인 부채문제					
6-4	세제개혁(감세·증세 포함)					
6-5	규제개혁·신성장동력					
6-6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균형 발전					
6-7	경제민주화(재벌개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정거래 외)					
6-8	금융개혁					

7. ‘외교·안보·평화’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7-1	연합군사훈련					
7-2	한미동맹(전작권 포함)					
7-3	한일관계					
7-4	균형외교(미중경쟁 스텐스, 중견국 외교)*					
7-5	병역제도(징병제·모병제)와 병역규모					
7-6	새로운 통일론(연합제·연방제, 2국가론 등)					
7-7	남북협력(기후·환경·전염병 외)					

*스텐스 외교: 노태우정권 이래로 한국의 대표적인 중립과 도의적 지원을 중시해 온 외교 방식

*중견국 외교: 미들 파워(middle power) 국가로서 강대국이나 경쟁(또는 적대)국들 간의 중재와 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외교

8. ‘기후·환경’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8-1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확대(공공 투자·개발, 계통연계 확충, 에너지펀드, RE100산단 등)					
8-2	탈원전					
8-3	녹색대중교통 확대·무상화					
8-4	탄소세					

9. ‘노동·일자리’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9-1	노조법 2,3조(노조 범위 확대, 손배소 제한)					
9-2	비정규직 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9-3	SI와 일자리소멸 대책(평생학습, 일자리 전환, 기본소득, 플랫폼세·로봇세 등)					
9-4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제					

10. ‘농업·먹거리’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10-1	농어촌 기본소득					
10-2	식량·농업안보와 농수축산물 수입 문제					
10-3	(공정)가격 보장					
10-4	지역(농어촌) 소멸 위기극복					
10-5	토양건강개선(유기농, 작물순환, 휴지기)					

11. ‘보건·의료·안전’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11-1	공공의료 확충·지역격차 해소					
11-2	건강보험 강화·무상의료 확대					
11-3	사회적 재난 국가책임제					
11-4	안전교육의 필수화					
11-5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					

12. ‘협오·차별·성평등’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12-1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12-2	이동권 보장					
12-3	성범죄 처벌(딤편이크 포함)					
12-4	낙태권 (임신중단권, 성적자기결정권)					
12-5	문화다양성 존중과 보호					

13.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13-1	청년·신혼부부 지원(주거·출생·육아)					
13-2	경력단절 지원					
13-3	비혼(출산)·동거·입양 등 다양한 가족모델 수 용 및 보호 제도					
13-4	국가 돌봄·복지 강화					
13-5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화					
13-6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13-7	연금개혁					
13-8	사실혼 제도					

14. ‘교육’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14-1	입시제도 개혁					
14-2	교권과 학생인권					
14-3	대학개혁(무상교육과 대학경쟁력, 인문학과 기초 학문 육성)					
14-4	역사교과서·역사교육					
14-5	기본 교육내용 개혁(노동·인권·생태·성평등·민주 시민교육)					
14-6	창의력·비판적 사고·협업 중심 교육혁신					
14-7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15. '과학·기술·학문' 영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응 답 범 주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거의 불필요
15-1	균형잡힌 과학기술 R&D 시스템					
15-2	편중된 반도체 정책 개혁					
15-3	AI 산업 육성, 규제, 윤리교육					
15-4	내실있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					
15-5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규제					
15-6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초학문 지원 및 연구 윤리 강화					

16.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성 () ② 여성 ()

17. 선생님의 연령은?

- ① 20대~30대 () ② 40대~50대 () ③ 60대 이상 ()

18.선생님의 최종학력은?

- ① 고교 졸업 () ② 대학 중퇴 () ③ 대학 재학 ()
④ 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⑤ 기타()

19.아래 박스에서 선생님의 현 거주지의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

단 현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나라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국내 출생지 및 현 거주지

-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구시 (4) 인천시 (5) 광주시 대전시
(7) 울산시 (8) 세종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도

※ 원하실 경우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자유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응답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를 공론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사회대전환을 위한 자유 의견 리스트]

번호	자유 의견 내용
1	- 재벌의 해악을 제거 - 경제 민주화 (노동기본권 보장) - 토지 공개념에 근거한 부동산 문제 해결 - 주요 산업 국유화 - 사교육 척결 -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 - 한미동맹 폐기 등 중요한 과제 논의 을 위한 사회대개혁 기구 설치.
2	-대통령권한 축소. -양당제 극복. -상향식 민중참여 민주제도 도입 확대. (국회 지자체 의회구성과 제도 개혁. 공공부문 감시 민중참여 확대 등)
3	~1 / 19~ 사회혁신 의제 Ver 0.2 1. 민주주의와 기본권 1.1. 대통령제 개혁 1.1.1. 대통령 권한 축소 및 분산 1.1.1.1. 대통령 탄핵 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 1.1.1.2.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국회 견제 권한 강화 1.1.1.3.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및 독립적 심사위원회 설치 1.1.1.4. 대통령 직속 기관 축소 및 권한 재조정 1.1.1.5.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구체화 및 보완 1.1.2. 대통령 선출 방식 개선 1.1.2.1. 결선투표제 도입 1.1.2.2. 대통령 임기 조정 검토 1.1.3. 국무총리 권한 실질화 1.1.4.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1.1.5. 정부조직법 개정 권한 제한 1.2. 정부 신뢰 회복 및 투명 성 강화 1.2.1. 정보 공개 확대 및 간소화 1.2.1.1. 행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 1.2.1.2. 정보공개법 개정 및 처리절차 간소화 1.2.1.3.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편 ~2 / 19~ 1.2.2. 공공 의사결정 투명 성 제고 1.2.2.1.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 실시간 공개 1.2.2.2. 예산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2.3.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1.2.2.4. 행정절차 전면 디지털화 1.2.3. 공직자 윤리 강화 1.2.3.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1.2.3.2.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상시 감시 1.2.3.3. 공 직자 윤리법 개정 1.2.3.4. AI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도입 1.2.4. 시민 감사 및 참여 확대 1.2.4.1.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전면 시행 1.2.4.2. 시민사회 감시기구 법제화 1.2.4.3. 블록체인 기반 문 서관리체계 구축 1.3. 지역 균형 발전 1.3.1. 지역 주도 발전체계 구축 1.3.1.1. 광역경제권 구축 및 특화 발전 1.3.1.2.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확대 1.3.1.3.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1.3.1.4. 공공기관 지방 이전 2단계 추진 1.3.2. 지방자치 강화
4	1. 경제성장지상주의 학력중심주의 일등제일주의를 없애야 해요. 2. 소수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나 오도록 정당명부제로 선거법을 고쳐야 해요. 3. 모든 사람들에게 달마다 5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법 을 만들어 주세요.
5	1. 우리 아이들이 박물관이 아닌 교정에서 춤추는 나비와 꿀벌이 볼 수 있는 친자연 환경을 물려주 자. 2. 치료보다 예방, 공공의료 시설 ,공공의 확충하자 3. 역사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학교 역사 교육, 인성교육 확대하자 결론: 역사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의식을 제고 하며, 돈버는 병원이 아닌 돈 없어도 병 걱정 없는 복지국가 , 사람과 자연이 함께 중시하는 나라,직 업차별, 성차별 없는 복지 강국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닐까요. 각 사람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꿈수가 아닌 본인의 사람구실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빨리 오지 않을까 요.
6	1.근대사의 역사정리가 꼭 필요 2.뉴라이트 단체 처단 3. 극우, 극좌 세력들의 무분별한 거짓말을 차단
7	1968년 프랑스 교육혁명(?)을 이제라되 도입해야함
8	20~30대 젊은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나라가됐으면 좋겠습니다..결혼 육아 내집마련이 당연한나 라..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걱정없이 살수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9	2030 여성 참여에 대해 지나치게 칭찬 하는 글이 많다. 빛의 혁명이니 새로운 세대 탄생이니 오버 를 하는 경향 이 있지만 모든 집회의 2030 여성들만이 참여한 게 아 니다. 다른 소외받는 계층과 남성들을 생각해서 그런 발 언은 알아서 자제를 해야 한다. 군 인은 시민에게 총을 쏘지 않을 것이 라는 강력한 믿음은 앞 세대에서 피흘리며 만들어놓은 것이다. 계엄을 경험 한 사람들이 2024년에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것이다. 그런 세대에 대한 존중해야 한다.
10	2030 응원봉 세대 정치 지도자 육성
11	2030응원봉세대가 아니라 2030응원봉여성세대라 합니다 대부분이 여성인데 더 부각되지못하는게

	아닙니다
12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청년 주거관련 복지정책의 적용 연령대를 높였으면 합니다.
13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논의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또 인내심갖고 진행
14	가장 기본적인 대전환은 인간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 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표피적인 정책보다 방향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있는 토론(공론장)이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인식 공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5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에 못지않게 언론개혁과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대학입시 문제와 보통교육 체제개편이 육아보육 정책과 함께 시급하다.
16	각개 각종의 산재된 사회대개혁의 각종의재를 내실있게 논의하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기위해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수구 친일파 파시스트세력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박멸해야 가능하다 생각함. 그들이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주요세력으로 존재하는한 사회대개혁은 논의조차 할수없고 개혁은 늦어지거나 언제든지 엎어질수있다는걸 이미 확인했음. 내란세력이 이사회에서 힘을쓸수있는 주요도구는 검찰과 언론이므로 사회대개혁으로 가기위한 필수불가결하고 긴박한 과제는 검찰해체와 언론대개혁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함
17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직접세도 누진세율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함
18	감사합니다
19	거대 양당제 개선을 비롯한 지역색 짙은 정치가 척결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선과 대입제도의 전격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20	거짓뉴스를 강력하게 처벌해서, 거짓정보를 알고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야합니다.
21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 위해 헌법이 지켜지고 사회질서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22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문항의 2030 청년이라는 단어로는 이번 응원봉 집회 세대의 특징을 가시화할 수 없습니다. 2030 청년을 떠나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의 수많은 구석에서 차별 받고 외면 당해온 소수자들의 분노가 연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2016년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많지만, 이제야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집회의 경우 소수자 외에는 광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보인 것 같구요. 문항의 성별 도 여성, 남성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성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광장에서 확인했으니 까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23	검찰 개혁(기소권만 유지)
24	검찰 없애기. 다른 법제도 개선
25	검찰 카르텔 와해, 디지털교과서 무효화, 각자도생으로 나만 살아남기 결과의 이대남 보수화 문제 극복,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출세하고 내편이 정권을 잡으면 된다는 극우편향을 바로잡는 길 모색, 2030 응원봉 세대의 결집, 지성과 감성만으로 안되고 영성까지 갖춘 리더십 필요
26	검찰개혁 완수및 공수처 강화, 내란및 외환죄에 대한 처벌 강화. 폭력및 반사회세력 엄단. 탄핵심판, 특검법 절차 간소화등
27	검찰개혁, 내란죄 강력처벌(직계가족3대 공직제한법 제정)및 은닉재산 압수조사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 내란범 및 그에 준하는 범죄자의 감형없는처벌이 반드시 필요함
28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자권리 증진을 위한 개혁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29	검찰개혁,국민의힘해체!
30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사회 근본을 변화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31	경제민주화를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등 자산의 유무에 있으므로 세금은 자산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을 높여 부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강남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편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 가까이 설치해야 합니다. 세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특례나 예외, 감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형법도 개정하여 양형

	을 전면 조정해야 합니다.
32	고고
33	고대사의 바른 정립으로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4	고졸 취업 노동자가 안심하고 먹고살만한 일자리와 노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국가책임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 이를 기준으로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민주주의 정치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35	공동체 모두가 잘사는 나라
36	공동체 생활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바탕으로 온마음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서로서로 돌볼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함 그러다보면 복지예산 방법예산 등을 줄일 수 있기에 이것을 농업 국가안보 교육등 다른 분야로 투자할 수 있음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 특유의 정서인 정 이란것이 탄생하게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음 성일들 또한 돌봄이 필요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됨
37	공정, 상식, 존중, 배려 사회
38	공직자들 의 비리척결 검사판사 변호사들의 대개혁 국힘당해체
39	과거사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소멸기한 없이 불의를 바로 잡고 제도개혁을 해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의 재탄생을 막을 수 있다.
40	과학.기술분야의 교육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인식되고있음.
41	관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자유, 평등,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는 누구나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평등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각 나라간의 상호 불가침 및 협조를 통해 각 나라가 발전해갈 수 있는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42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43	교육 존중
44	교육에서 도덕과 양심을 중요시했으면 좋겠 음니다,
45	교육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역사의식과 철학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중심의 입시제도는 꼭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6	교육의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입에 모든 것을 거는 제도하에서는 제 2의 윤석열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47	구호가 아니라 실사구시가 필요함.
48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함. 징벌적 손해소를 도입. 국공립대학 네트워킹을 통한 평준화.
49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종전선언과 남북자유왕래도 속히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국가보안법은 왜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폐지해주세요.
5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바탕으로 통일의 길을 합의해가는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위험을 견어내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국민 돈은 덜 들고, 구조개혁만으로도 자유/평등/박애의 나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앞선 민주주의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보다 더 나라님(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고 힘을합쳐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뤄냅시다.
53	국민 모두에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정책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써야한다. 지역, 성별, 젠더, 노 소, 종교, 장애, 이념 등에 대한 차별과 차별적 인식이 소외를 부른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다
54	국민기본권 제약의 근본조건인 전쟁 상황 종료, 종전 문제의 국민 여론화가 필요. 전쟁 상태를 방치한 채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간 불평등 예측관계, 군사주권 유린, 정치적 비민주-독재가 악순환 되고 있음. 분단의 성격적 본질이 바로. 전쟁체제-남북적대구조임. 전쟁 상태의 종식, 종전이 사회대개혁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함.
55	국민소환제의 완화로 선출직 권한의 약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반보 앞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개혁안은 헛일이 된다.
56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중요사안에 우선 반영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국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하고 국가 아젠다에 대해 정기적으로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게 투표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표성 없는(국민이 선출하지 않은)소수의 현재 재판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도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위험합니다.
57	국민이 편안한 분위기안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
58	국민참여민주주의의 확산,확대 희망
59	국집당해체 의식의 대전환 전장권회수 남북평화조약
60	국회의원 수 400명으로 확대/국회의원 특권 폐지(연봉 절반으로 삭감, 보좌관 절반으로 축소, 차량 제공 폐지, 연금제도 폐지, 정치자금 절반으로 축소 등)/비례대표 200명으로 확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서울대 등 명문대 20개 입학생 추첨으로 선발하고 점차 50개까지 확대/수능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내신 전형 확대/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AIDT 교육자료로 전환/무상의무교육재정 국가부담 확대/교원 대폭 충원
61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반드시 도입해서 지역민의 대변은 방치하고 대통령에게 한 줄서고 야합하는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해야합니다.
62	국회의원의 질적향상 필요
63	극우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64	극우와 보수/자유주의 양당제로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탄핵 이후 다 당제를 통해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누구도 배제됨이 없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전환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65	극우의 최소화
66	극우주의,파쇼정치 탈피 보수주의자들과도 같이 공생할 수있는 사회적 민주주의 개념 정립 및 실현
67	근면 성실 정직하고 양심적 인재를 존중 해야 합니다. 법 꾸라지 기회주의자는 퇴치.암기보다는 창의 탐구 정신 배양 해야 합니다.
68	급진적으로 극우 극좌로 나뉘어 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치, 언론, 특히 유튜브등이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이용하고 있어서 자성이 필요합니다.
69	급하게 정책을 진행하기보다 실행성가능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높혀서 진행
70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1	기존 정당과 거리를 두고 독립성, 자주성을 가지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당의 이 중대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에 대한 대전환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72	기회가 왔을때 기필코 이루어야합니다!
73	기후위기 절대 극복. 출생부터 대학까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육아비, 교육비, 교제비, 기타 등등 모든 지원 무조건 무상(100%) 지원. 전국민 무상 의료지원. 교육제도 완전 개혁.
74	기후재앙에 대비한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5	깊이 뿌리 내린 친일, 내란, 부패, 권위주의 세력이 잘 정리되고, 사회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정의로운 공동체, 서로가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76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다 나라에 인재가 없는게 아니다 인재를 함양할 관리가 없다 나라에 올바른 국민들이 없는게 아니다 친일 종자들이 권력자 여서다
77	낙태권이 아니라 임신중절권이라고 표기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8	남북통일 민영화중단
79	내각책임제, 중대선거제,지역정당,비례대표 확대등 정치개혁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제 강화,주민 소환권,발의권 도입 필요
80	내란 잔동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이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발적 반성과 사과없는 어설픈 화해, 사면으로 면죄부 줘서는 안됩니다! 모든 정책이 장기적 플랜을 거시적으로만 가지되 현실운영에 있어선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81	내란세력 탄핵하고 동조세력 국힘당해체 하여 헌정질서 회복을 통한 조기대선으로 국정안정을 확립해야 한다 .
82	너무 길고 ... 질문 주시는곳이 어딘지 매우 궁금합니다만 보냅니다 바쁘데 참...몇번 치우려다 간신히 보냅니다
83	노동존중. 노동기본권 보장.
84	다수의 지혜를 구하고 공론의장에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야함.그로인해 정책제안 그리고 이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함.
85	다시없을 소중한 이 기회에 제발 한국사회가 바뀌길 희망합니다.
85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해야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이고 일부 종교계에 위탁 중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국가가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아닌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86	다양한 논의로 그치지 말고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실현될때도 교수(지식인)들의 의견만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주시기를
87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꾸준히 숙의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 몇몇이 계속해서 하시던? 해오던? 사람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바이다.
88	다양한 연령 소외되는 분야나 약자 배제가 없는 개혁 논의.필요
89	다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
90	단기적으로 의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선등 정치일정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중장기로 개헌과 법개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91	당장 통일 아니더라도 일단 분담체제 극복, 적대감 해소 등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함. 뉴라이트, 극우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환경을 없애야 함.
92	대전환 꼭 해야 합니다.
93	대전환!
94	대전환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법치의 강화가 중요합니다.위법,위헌에대한 행위는 단호해야 합니다.
95	대통령4년중임제 + 정부통령 연동제 필요. 선거구제도 개혁: 중선거구제+지역비례대표제 평화안보체제: 군사동맹폐기+군사비삭감 남북교류협력: 남북정상정례회담+민간협력보장 보건복지강화: 의료공공성강화+복지예산확대
96	대학입시와 관련된 중고교육의 대전환을 바라니다
97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양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거 때만되면 빨갱이 일본놈 앞잡이 하는데 모두 부질없는 모순된 짓거리 멈출수 있는 법 재도화를 정착시켜 주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98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방법적인 고민들도 나뉘으면 좋겠습니다.
99	도덕과 교양 교육의 적극적 활성화
100	돌봄, 사회적 자본, 역량 강화 지원, 혁신 생태계 차원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101	마을공동체 강화,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즉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함.
102	많은 문제가 각자도생, 자본주의, 생태감수성 결여, 타자에 대한 이해 결여, 복지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정치 대개혁과 함께 지구 전체의 문제인 기후재난을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고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3	많은것 바라지 않구요 거국내각구성과 국가보안법폐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발 내딛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안될것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말고 한두가지에 집중해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104	모든 악의 근원은 분단체제와 그 연속을 바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의 종속이 사라지고 반북,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때 모든 분야에서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 미국에의 예속과 분단이 계속되는 한 어설픈 개혁논의는 변혁상황을 호도하고위기를 모면키 위한 종속기득권들의 술수에 이용당하는 기제

	로 사용될 뿐.
105	무상교육, 대학 무상입학 무상교육
106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민주정부를 선출하여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07	무한정글 사회가 학교에서 계속 재생산 되는한 아이들은 옆자리 친구를 무너뜨리고 올라오는 시스템 이 일상이 되어 공동체 연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재생산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최대한빠른 시일 내에 이뤄서 세상을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민주 시민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타의로 인해 상경한 지방민으로서 정말 서울 공화국은 사라지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방에서 살고 싶습니다 (5분 거리에 편의점 3개 있는 그런 상업 인프라 말고 의료 주거 직업교육 등이 잘 갖춰진)
108	문재인정부 시절 정책을 쫓 이어가면서 부동산만 잡으면 선진국일거같아요
109	문제점이 있을때 개선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좀 불편해도 서로 경청하고 자주 소통해야합니다. 어떻게 해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고 완벽하지도 않을테지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면 그것이 그때의 정답일것입니다.
110	미제 축출 투쟁!!!!!!!!!!!!!!
111	민주당의 근본적 변신과 기본소득당 해체, 다른 정당들의 합당이 필요합니다
112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 분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113	민주시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4	민주유공자법 촉구
115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중요합니다. 나라와 사회의 민주화, 자주, 통일, 민중생존권 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열사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한국 사회 대전환의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116	민주적 기본질서법 제정
117	민주적인 정권으로 다시 가지고 온 후 동시다발적으로 마구 해서 보수기득권화된 언론기관들의 여론 전으로 피해보지 말고 실리적으로 정권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하기 바란다 전작권의 경우 그 당시는 좋았지만 실제로 가져오기 쉽지 않다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듯
118	민주주의 원리와 민주시민생활을 초등학교부터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119	민주주의 회복과 극우 준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함
120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정의를 실현해 자주적인 나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립시다 또 한 분단을 악용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설문을 비롯해 풀뿌리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견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의견 수렴이 활발히 되기를 소망 합니다.
121	반드시 윤석열 탄핵이 되길바랍니다
122	반민족 친일 세력 척결하고 나라의 정신을 다시 세우자
123	발안제 말고 실질적인 시민 직접민주주의 강화 요소를 발굴해야 합니다.
124	백가쟁명식의 과제 나열보다는 꼭 필요한 필수 과제를 3가지 정도로 제시하여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파급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소, 국가보안법 철폐...이런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반드시 쟁취하여야 합니다.
125	범민주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 필요
126	범법자 재산 몰수
127	법개정 내란우두머리 형량감형 사면 금지 기득권 자들의 파렴치하고 선동적 으로 말도안되는 논리를 퍼 국민을 혼동하게 하는 유튜브. 정치인 척결법 개정 책임론 강화 법앞에 평등 한 나라 대한민국 헌법수호 강력히 시행 법꾸라지 법을 무시하는 자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 지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잘못된 검찰들의 무능하고 직무유기 철저히 관리감독 12월3일 개엄령후 동조자 부역자 철저히조사해 구속 엄벌 하길 바랍니다
128	보다 유연하고 소통이 자유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정치 개혁(기득권자들을 위한 권위유지의 통로, 선거비용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계층간 존중과 자본의 재분배, 교육 개혁, 입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보살핌 받으면 좋겠습니다.

129	보다 평등하고, 사이좋은 나라, 성장보다 공존의 가치를 소중히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130	봉건잔재 친일잔재 세력과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국가제도와 시스템 내에서의 고착화된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 일제시대 이후 역사정의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교육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목표와 형식이 기존 친일 봉건 세력들의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정부에 맞는 공무원체계 시스템과 지방자치 분권제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전국민 교육활동이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	봉사로 일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여(각 정책 분야 전문가 퇴직한 사람 또는 현직 근무 등) 현직 정책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현 참여연대)가 한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목소리로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부당한 행동이나 정책을 제지할 수 있다 핀란드 처럼 시민의 힘이 가장 크게 해야 올바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2	분단과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133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반드시 개혁해 나갔으면 합니다.
134	비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배하는 제도적 개혁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특히 언론의 책무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 편파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토론과 심층 취재 등의 다양한 자정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135	비상계엄, 국가원수의 탄핵을 이유로 기타 정책들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책과 사회 구조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자정작용 또한 그 나름의 주기로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양 극단에 있는 주장에서의 그 어떤 경계, 타협점을 잘 찾아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136	비정규직을 없애야함. 저출산, 과다경쟁, 지역차이등이 발생하는 모든 원인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때문임.
137	빈부격차와 교육개혁과 부동산 정책을 확실히 개혁하는 게 절실히 필요!!
138	뿌리 깊은 친일 내란 기득권세력을 청산하는 것부터 대전환의 시작이다
139	사법개혁 특히 배심원제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140	사법부 배심원제도 실시 검찰개혁 완수 통일방안 현실화
141	사회 대전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42	사회 전반의 혁명적 전환을 기대합니다 총독시대의 식민국민으로 살아가는 이가 많습니다 출세주의와 파시즘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 조주동 폐간 교육혁신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143	사회개혁 절실합니다 의견들을 모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주세요
144	사회대개혁 특히 정치개혁, 노동민주화, 차별 금지 요구됨
145	사회대개혁과 동시에 기성 적폐 청소 (내란세력 척결, 역사반역세력 소탕 등)를 철저히 진행합시다.
146	사회대개혁을 입법으로 완성 해야 합니다.
147	사회악과 우리의 미해를 위협하는 파시즘 데거 및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필요
14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사람의 존엄성이 지켜지게 하고 시민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는 세상으로 가야합니다 사회대개혁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149	사회적으로는 언론개혁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나라의 미래를 만들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검찰개혁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그 권력으로 대통령된 자가 지금 나라를 아수라장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역군 길러내는 데 집중했던 획일적 공교육시스템이 산업화 시대가 끝난로는 능력주의, 학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으로 나쁘게 질적전환 이뤄져 지금 21세기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이념을 해치고 점차 사회계층화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우경화, 보수화, 전체주의화 현상은 교육에서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0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151	새 헌법에 명시. 새 헌법 작성 시 국민참여제도 적용. 국민청원제처럼 국민 제안과 3만명 국민동의 시 헌법 준비기구에서 반영 또는 답변 의무화

152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 대한 배경과 현실의 담론확산으로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53	생명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남북관계 획기적 전환, 다양성과 비례성이 강화 되는 정치 체계가 확립 되길 바랍니다.
154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세상이길 바랍니다 재난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농촌 · 어촌 · 산촌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경청과 존중바랍니다
155	생애주기별 주거 공급이 필요할 시기
156	설문 문항의내용이 절실한 의제라 선정에 수고많으셨어요 모두 개혁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다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57	설문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대주제 고르고, 다시 세부주제 선택하는 방식이 더 좋아보입니다.
158	성별 남자/여자 말고 제3의 성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159	성별구분을 남여 양성으로만 표시하는 것부터 바꿔주십시오
160	성별의식격차해소를 위한 남성대상 맞춤형 의식개혁 대규모 프로젝트 실시해야 ~ 극우폭력집단양산을 제어하는 장치 필요~~ 찌질이 남성들 교화를 위한 고도의 교묘한 국가 10년프로젝트 계획해야한다
161	세대가 동행하는 길은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더욱 안전하고 열려있는 길로 변혁시키는 길입니다. 젊은이들이 더욱 수월히 사회의 주역이 되게 제도가 뒷바침해야합니다
162	세대간 갈등 해소책
163	세대간의 깊은 골은 결국 기본정인 역사적 정체성과 편중된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향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큼니다. 인간의 존엄과 국가에대한 경외심은 어려서부터 교육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비판이 편중되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하수로 전락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건전한 인재의 교육은 결국 건전한 사회로 이어지게되고 환경이나 인권. 과학의 발전등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시제도부터 바꾸는것이 교육개혁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의 편협함을 입시로 정당화하고 수시의 불투명성을 거쳐온 세대들은 당연히 비리의 하수인이 될것입니다. 인성과 이성보다 찍기와 속임수부터 배우는 작금의 입시제도부터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정신이건강해야 바른것을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교육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16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65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대전환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66	소득양극화, 주거의 양극화에 따른 20.30 신남성연대의 출현은 부모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듯 보입니다. 금수저, 흙수저현상이 보수.진보라는 이념대립이 아닌 금전만능주의로 인한 문제이지 아닐까 생각된다
167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8	수고하세요~
169	수고하셨습니다
170	숙의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171	시급하게 대통령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국저안정시켜서 정치,경제,외교등을 정상으로 복귀 시켜야한다. 현재 대통령과 군동별들과 국무위원, 계엄우두머리 동조자들 싹 처벌하고 정상국권을 유지해야한다. 이게 나라냐? 너무하고있다. 뽀뽀함이 극에달한자들 시급조치해야한다.
172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173	시민의회를 정례화하여 한국사회 대전환 이슈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제도화하도록 한다. 시민의회는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함으로써, 형식과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알차게 준비하고 끈질기게 실천하게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대전환 프로세스에 시민의회 설치가 꼭 반영되길 제안한다.
174	시민참여형 숙의과정 제도를 법제화

175	아동·청소년시기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공론을 시작하고 입시위주보다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평등이 심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야하고 검찰개혁, 국민발언권 그리고 주민자치법이 신생되어야 한다
176	양극화 해소, 소득격차 축소
177	양극화 해소가 가장 필요(최저임금 많이 올라가야함) 그러가 위해선 언론과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야함
178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기본 소득, 교육 격차 해소, 공공 시설 확대 등) 강화 민주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민교육 강화,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 기후 변화 대처, 전쟁없는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위한 정책 등
179	언론 가짜뉴스 삼진아웃 제도 필요
180	언론,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181	언론개혁
182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183	언론개혁, 기존미디어의 지원과 감시기능을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하고, 의도적인 왜곡 편파 방송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 유튜브 미디어의 선동에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184	언론과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안 됩니다. 최우선 과제들입니다.
185	여성혐오와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186	역사교육 의무화하여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강화시켜 더 이상 왜곡질하는 뉴라이트 것들이 등장하지 않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7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식민지 유산이 정리되지 않아 이 시점에서 내란까지 일으키고 뻔뻔한 기득권들이 많아 충격이다. 민족의 역사와 철학적 소양의 바탕 위에서 주체적으로 지역차별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어야 한다.
188	역사정의 실현!!
189	연 1회 이상 학부모 교육 의무화
190	오늘 모든 정치사회문제들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근본이 잘못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독일은 이미 오십여년전에 경쟁은 야만이라는 모토하에 교육제도와 교육내용등 전반적인 혁신을 이뤄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없이 오로지 입시위주의 경쟁과 사지선다형 단답형 문제풀이만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불행하고 또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번 돈을 허리 휘도록 사교육에 돈을 쏟아부어야하는 부모들도 불행하다 이런 입시위주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불평등은 심화되고 결국 사회구조도 서로서로 협조하고 아우르는 분위기가 아니라 승자가 독식하는 체제로 흘러간다 일찍이 철학이나 인문학 심리적 통찰을 공부해보지 못하여 제대로 사고하는 힘이 부족하여 사회적 종교적 선동가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개인적 파탄 그에 이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된다 승자독식에 불건전한 주먹투기로 이것도 결국 윤리교육의 문제인데 일반 서민들은 정상적 직장생활로는 집한채 마련할수 없어 결국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나올수 없는 저출생국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대로 가면 국가존립 자체가 위험한데 소위 위정자들은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것 같다 사십여년전 프랑스도 똑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1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고 2 소득에 따라 부부들에게 자녀수에 따라 적지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녀수에 따라 그에 알맞는 평수의 아파트를 거의 무상 임대해 주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귀한 청년들 살수 있도록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을수 있도록 대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포장만 그럴듯한 국회의사당은 수도이전과 더불어 대전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청년들을 위한 날림이 아닌 제대로 지은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어볼 수도 있겠다 더 할말은 넘치나 지면상 여기서 줄입니다
191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남북 분단 현실 해결을 위해 평화통일에 근거한 남북관계 새로운 정립 반드시 필요.
192	우선정치적인안정이필요합니다. 국민의당정치인들의밀어붙히고조작질하는상식이하의언행.말.법으로다스릴수있다면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세비봉급을낮추어주십시오
193	위에 조사된 내용들이 모두 필요한 개혁 과제들 이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과제들이 있고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총의를 모아서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

	부분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한 명제들을 제시하는 것 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다듬어 가는 열려진 통로들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94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는 것 보다는, 일반 국민과 청소년들이 편향된 유튜브를 보고 정치 학습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품질 좋은 유튜브를 적극 생산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페이크 뉴스나 극단적 선동에 일일이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캠페인을 전개해야 함
195	윤석열과 전광훈 일당 처벌, 학벌주의 타파, 지역주의 해소. 혐오 문화 개선
196	의료.교육.주거 문제는 국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환경.에너지 강력히 외교.국방은 유연성.자주적 지방분권 필수 엘리트 정치 철저 배제
197	이 설문지는 왜 성별에 남성/여성밖에 없습니까?
198	이런 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문 내용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99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성평등 교육을 유아 청소년부터 전 시민에게 확대해야 합니다.
200	이번 계엄을 통해 남북관계가 적대적이면 극우세력에게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 공존, 통일 등에 대한 담론도 심도있게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집회 때 여전히 퇴진을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파면을 외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는 현상 황에 적절한 구호를 정리해서 집회 참여자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세상을 바꾸자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성평등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내란세력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등
201	이번 비상계엄령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로 망국적인 학벌 입시 교육체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체제에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의 활성화와 새로운 정책들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	이번 한국사회대전환 활동에 대한 콘텐츠(온오프라인 활동 내용)를 축적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 바랍니다.
203	이번기회에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204	이번에는 기필코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방면이 어렵다는 생각에 선차적으로 해야 할 목표를 크게 3가지 정도 정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하여 응원봉을 들고 반복적으로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5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개혁과제에서 뒷걸음질 치면 확장력이 커진다고 정치권이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206	인구노령화와 부동산에치우친 정책등의 사회문제는 반드시 미래세대를위해 개혁해야합니다
207	인성, 도덕, 철학 교육 필요
208	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9	일거에 대전환을 이루기 어려우니 몇 개 어젠다에 집중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게 필요하고, 광범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10	일단 이재명한테 요직을 맡겨 봅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앵간한건 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백년지대계를 준비 하든 될듯~~
211	일제청산 과거청산 분단청산 등 적폐청산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체제구축 거대양당독점을 타파하고 다양한 소수정당 국회진입으로 정책대결과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개혁
212	일차적으로 엄격하게 다룰 사안은, 가짜뉴스 처벌의 엄중화입니다. 언론 환경이 바뀌어야 유튜브도 정화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의견을 소통하게 만들 임무가 있는 언론, 그리고 인재의 균등하고 효과적 활용, 끝으로 다시는 계엄을 못하게, 하더라도 바로 반란죄로 처벌받게 특별법 필요합니다.
213	자녀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엄마및 워킹맘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자유롭게 키울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214	자랑스러운 살기좋은 나라로
215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큰공동체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법률로 인정해야 합니다.
216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성 제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스한 사회를 위해 이견을 조정

	한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217	자주 통일 최우선, 미일 식민체제 탈피 시급, 교육 혁명 절대 필요, 종일종미 반역 매국노 집단 소탕, 토착왜구 2세3세 부정 유산 축재 몰수 절대 필요 반민특위 재가동 만민공동회 등등 남한 사회 전면 재구축,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희망 없음.
218	자주권(군사주권) 실현, 친일청산, 선거법 개정(정당명부 비례대표제 100%)
219	자주오는 기회가 아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말고 사회대개혁 완수하자
220	자주적 혁명정부 수립 한미 한미일 동맹 파기 핵전쟁 반대 대 중미러일 중립외교 남북 교류화해평화 회담 빈부 격차 해소 매판 재벌 해체 송정학 바른 학문을 숭상하고 장려하라 결민심 인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정군제 군제를 개편하여 강군으로 거듭나라 절재용 나라의 재부를 아껴라
221	작용 반작용 법칙(뉴턴 운동 3법칙)처럼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보수+중도층+진보 가 연대할 수 있는 온건 개혁의 길 잘 찾았으면 합니다.
222	저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집회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로 SNS에서 후원, 서명, 정보공유 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보니 사이버공간에서의 혐오의 생성과 확산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사회의 큰 문제가 된 2030남성들만이 아니라 2030여성들 사이에서도 방향과 그 표출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양식으로 혐오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혐오문화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번 내란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시원스런 해결방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다양성과 교차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 정도가 떠오를 뿐입니다. 더하여 사이버공간에서도 소통의 광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브가 아닌, 폐쇄적 커뮤니티가 아닌. 모든 세대가 이 온라인, 즉 사이버공간에서 혐오를 배운다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3	전 국민의 출생부터 대학교육 무상화, 입시교육 철폐,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 과정 교과서에 의무화, 부동산 공공임대 정책 확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 거주 문제 해결, 고금리 사채 집단 공영방송 광고 금지, 잘사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도록 부자감세 철폐, 가짜유튜브뉴스 법적 처벌 강화, 평생교육 및 복지케어 전 국민 확대 실시,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종 택 확대.
224	전국 어디에서도 공공임대주택(예, 싱가포르-99년임대)을 지어 주택으로부터의 부담을 줄여 인생을 여유롭게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한다.입시위주의 교육이 철폐되어야 한다.지금의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킨다.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검사들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조직을 재편성해야 한다.또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손질을 해야한다. 특히 종편과 유튜브들의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벌금을 명박이가 노동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확실히 매겨 이 사회에서 추방하여야 한다.군인들의 양성기관인 삼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민주주의의 군인들을 양성하도록 해야한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해 누구라도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처벌을 옳게 받지 못함으로써 많은 후유증을 가져 왔는데 이번에는 꼭 법대로 사형과 사면없는 무기징역을 해서 이 사회와 국가의 정의로운 공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225	전쟁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선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진전은 분단체제의 폭력적 논리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노동, 소수자의 권리 투쟁 등을 종북, 빨갱이로 덧씌우는 것은 분단이 가져온 파시스트의논리이기에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도 돌으킬수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없는 민주적 진전은 있을 수 없으며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입니다
226	전쟁의 위험이 없고 노후가 보장되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도 국가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시립병원의 전국적인 확대도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27	절차 및 과정등 시스템확보를 위한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
228	점차극우화 경향이 짙어지는 보수 우익이 나라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미고착화된 세대의 단절은 극복하기 힘들다고 본다.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언론 개혁 이 시급한 과제인듯 하다

229	정의와 복지를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시급합니다. 경쟁사회 타파하고 배려와 사랑을 위한 사회개혁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0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대에 맞지않은 낡은 법과 규제 등을 개혁하여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시스템을 변화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여 모두가 기본권이 보장되어 더이상 먹고 사는것에 걱정을 내려놓고 국민한사람 한사람 개인의 행복을 정당하게 추구 할 수 있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듯이 전체적으로 개혁은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31	정치 권력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232	정치 극단적인 대립구도 개선, 언론 역할 재정립 등
233	정치개혁,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반드시 하여 윤석열같은 인간이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 모든 분야를 재정비, 빈익빈 부익부를 막고, 역사교육 강화, 바른 사고를 갖는 교육이 필요하다.
234	정치개혁(검찰개혁) 농업생산환경(농지 휴지기) 개선 부동산 안정대책을 위한 법안필요
235	정치개혁과 사회구성원의 대국민 통합 노력, 국가 공동의 비전제시, 정치인 대국민통합교육철실
236	정치구조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현 헌정질서는 반드시 변혁되어야 합니다
237	정치범죄 사면 제한 정치인의 주소지 외 대표성 제한 기본소득 등 기본인권 보장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비 지원, 학생 무상교육
238	정치인 겸업금지.봉급없이 실비지급. 기간동안 절반의 임기동안 지역구 순회활동의무화
239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 필요. 약력 상시 공개, 교육 제도 개선 필요함
240	제도 개선을 통한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민주시민교육을 유아부터 시작하여 일상에서 합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동반해야 함
241	제도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현 제도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운용과 편법으로 새어나가는 선심성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지출과 결산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242	제일의 과제는 언론개혁이며 제이의 과제는 검찰/사법개혁입니다 제삼의 과제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안착시키는 것이고 제사의 과제는 교육개혁입니다(수능철폐/대학원까지 무상교육/국공립대 통합) 이를 토대로 나머지 개혁과제를 다뤄야 성과가 있을것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43	좋은 안건 설문조사 전파에 감사합니다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44	주권국가와 자주경제가 꼭 필요하며. 모든 것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은 없어야 될 시대적 의무임 그리고 돈이 없어도 주거보장과 의료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역사왜곡은 법으로 처벌되어야됨.
246	줄이자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폐단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의 밥그릇 늘리기 식의 혜택들(채용의 세습, 유리한 법규 제정, 공금의 유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7	중고등학교에 인문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갖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청소년기에 정립해야 합니다
248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민생안정, 저소득 및 중산층의 복지 증진, 행복보장)
249	중앙집권화된 권력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공론장인 시민의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여 핵심국정과제에 대한 토론과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250	지금 광장으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목소리들이 부디 오래도록 지속되어, 8년 전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251	지금은 자주권을 되찾는 투쟁을 중심으로 파쇼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길에서 통일을 놓치 말아야 합니다.
252	지방자치제 중 특히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을 시군당 500명 1000명의 규모로 자원봉사제로 운영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밑거름을 바꿔야한다
253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을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언론개혁과 정의로운 사법체계

	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254	직접 민주 정치제도의 강화 및 지원 필요
255	질문이 너무 짧거나 무의미한 내용이 많습니다. 매번 떠드는 전환 혁신 창조 변화 이따위 내용 별 의미도 없고 지겹기만 합니다. 한번에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고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게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조사들 부터 매번 전환이니 대전환이니 수사적인 표현들로만 좋은게 좋은 거지 라는 식의 여론을 내보이려고 할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방향과 개선점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56	질문이 애매 하네요
257	집단지성 형성을 위해 시대에 필요한 아젠다 논의 숙의민주주의 토론이 일상화되는 공론장이 형성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258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법 평등 보장, 가짜뉴스 벌금 강화, 언론 개혁(포털 포함), 교원 인권 강화/보장, 사법부 해체, 언론사 퇴출 및 징벌 강화
259	차별과 혐오의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특정주제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들이 정치권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60	참여와 대화를 모든 분야의 개혁에 근본으로 세우기
261	창의력, 전인교육의 일상화 누구나 쉽게 만나는 공동체,평등,민주 교육
262	천민자본주의에서 복구라파식 사회민주주의로 개혁
263	천천히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264	철학, 가치관을 내재한 시민이 되도록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든 법이든 이를 기초로 생성되길 바랍니다.
265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로 인해 우리 민족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과 북 경제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266	초등조기 입학,2년제대학 대폭 확대
267	초등학교부터 민주주의 교육 필요. 사교육 금지만이 사회적 불평등 제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268	초중고..정치교육 의무. 노동교육 의무. 문어발 재벌 해체. 돈이면된다는 세상 없애야. 통치독재 개꿈들 처벌.이들 괴멸시켜야
269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270	탄핵정국 이후 찬반의 대결구도를 전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신속히 마련하고 치유와 포용의 가치, 공동선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시민사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책 공론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리더십에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71	토론문화 발달을 위한 교육 한국은 반대의견만 나오면 적대시하고 싸움으로 번지는 문제가 심각함. 상재의견을 존중하고 중립과 양보하는 방법 교육이 필요함
272	토지공개념 공공주택 인식을 높이고 정책,행정으로실현해야
273	트럼프의 영토 확장 야욕, 산업 침탈 야욕으로 인해 우리의 주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자주적인 외교로 자립경제, 자주 경제를 만들어나가 외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공정거래 제도로 우리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2.3조의 졸속한 통과 등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농민.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진보세력이 탄압받지 않고 더욱 대중친화정책을 낼 수 있게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274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단체를 만들어 새 정부에서도 유지하면서 개혁을 제대로 실현해야 합니다. 정당 정치인은 자기 밥줄에 좌우되므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이 사회를 바꿔야합니다! 한국의 위기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각자도생이 심화되는 절망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275	평등세상을 만듭시다
276	평화
277	필요한 정책이지만 때를 놓쳤다는 판단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놓여온 문제를 건지하는 입장입니다.

278	학교 밖 청소년이나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원을 늘려서 교육다운 교육을 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279	학생때 정치를 입밖에 내면 안되는 것으로 많이 인식했다 학생~청년 세대의 정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여의도에 고여있는 그들만의 정치를 더 넓고 다양하게 해석하게 할 것이다
280	한국사회 대전환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자발적 참여 등 책임의식 강화,술선수범 실천 필요_---_사회적 비전 제시, 재벌/자산가의 사회적 기부, 고위공직자의 도덕의식/공렴자세 실행 등등
281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통하여 대타협을 이루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공론화 속의 과정에 온국민이 참여하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282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교육입니다. 통일한국을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잘려서 아픈데 마약 주사를 맞고 아프지 않은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기극이 통하겠습니까?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83	한국사회의 문제는 자본의 원가절감과 이윤극대화를 노동자들의 안전을 비롯한 삶 전체의 보람보다 우선시 하는 불의스러움으로부터 비롯한다. 이런 지옥 조선을 극복하려면 진보좌파 정당이 성장~강화돼야 한다. 이런 민의 대표성의 민주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284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국론분열
285	한글
286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고 다음이 국민화합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안하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287	한반도 평화와 직접민주주의 가치 반영, 민생과 국민복지 향상,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88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89	헌법 개정 반드시 하자
290	헌법 개정 제7공화국 비전 수립을 위한 총론 필요
291	헌법 개정, 7공화국 수립, 대한민국의 생명평화적 재구성 필요!
292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일류국가 성장이룩하자.
293	헌법 개헌
294	헌법가치 살리기, 헌법전문에오일팔정신넣기, 계엄이나독재정치를하는정치인이나군인사형시키기 등
295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균형의 철학에 기초한 선진화이다.
296	헌법도 개정하고. 특히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하고. 사회민주의적 제도 개혁, 친일 청산과 함께 국가관 정립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한 가치를 자주적으로 독립시켜 강소국이 되기를
297	헌법질서체계의 확고한 정립 양질의 일자리 기회 창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력개발의 교육 극우세력 준동의 철저한 척결
298	혁명적 변화로 모든게 되면 좋겠지만, 당장에 지난 촛불정부의 약속 수준이라도 이행하게 해야한다. 세월호진상규명을 꼭 포함하자
299	현실성 있는 사회 유동성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0	현재 인간수명에 맞는 노동구조로 변혁이 필요합니다 노동은 생계유지만이 아닌 인간이 사회성을 유지하며 살아갈수있는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업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1	환란사태와 FTA 도입된이후 고용안정파괴/수출대기업초과 이득/공정거래파괴구조/ 제조업 탈출로 일자리 사라짐 등의 경제사회 구조의 피해를 벗어나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방안
302	황금만능 및 출세지향을 지향하는 듯한 현 기성세대의 가치관 전환, 그에 따른 학교 교육 강화가 필요.
303	후손들을 고려한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04	GMO표시제, 정당지지도별 의석배분제, 대체보완의학 건강보험 보장, 현미와 통곡물과 우리밀 생산 지원과 국민식생활 개선,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문화예술과 철학 역사 놀이 상담 분야 일자리 생계 보장), 수도권 이외 지방 국고 지원 확대
305	좌우 분열 해소

306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 대통령 인사 독점권폐지(예, 헌법판소, 국회 추천 인사- 국회의장이 임명, 대법원 추천인사 - 대법원장 임명) 3, 검찰기소독점권 폐지(수사 기소일치제 채택-공수처, 경찰 기소권 부여) 4, 위성정당 만드는 정당투표 개혁
307	근본모순을 바로잡아야 다른 모순도 하나씩 풀립니다. 이번 내란의 근원인 냉전 분단 체제를 이제라도 해체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한국 자주화에 있어서도 광장의 목소리, 비상행동의 정리된 요구안을 기다리겠습니다.
308	기본소득제도 도입 대학평준화 공공주택 확대

[부록3: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 2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

1.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차 설문조사

- 기간: 2025년 1월 22일~2월 5일
-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 주관: 전국비상시국회의
- 참여: 707명

□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차 설문조사는 11개 영역 68개 의제를 대상으로 함.

1	정치개혁	대통령제(4년중임)
2		선거제도(결선투표제, 비례성·다양성 확대)
3		언론개혁
4		검찰 및 사법부 개혁
5		지방분권
6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7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8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9	경제개혁	물가안정(공공요금 등)
10		주거안정(부동산, 공공주택 등)
11		가계·중소상인 부채문제
12		세제개혁(감세·증세 포함)
13		규제개혁·신성장동력
14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균형 발전
15		경제민주화(재벌개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정거래 외)
16		금융개혁
17	외교·안보·평화	연합군사훈련(대규모 훈련 중단 등)
18		한미동맹(전작권 반환 포함)
19		한일관계 재정립
20		균형외교(미중경쟁 스텐스, 중견국 외교)*
21		병역제도(징병제·모병제)와 병역규모
22		새로운 통일론(연합제·연방제, 2국가론 등)
23		남북협력(기후·환경·전염병 외)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공투자·개발, 계통연계 확충, 에너지펀드,
24	기후·환경	RE100산단 등)
25		탄소중립정책
26		탄소세
27		탈원전·원전산업 혁신
28		녹색대중교통 확대·무상화
29	노동·일자리	노조법 2,3조(노조 범위 확대, 손배소 제한)

30	비정규직 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31	AI와 일자리소멸 대책(평생학습, 일자리 전환, 기본소득, 플랫폼세·로봇세 등)
32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제
33	경력단절 지원
34	농업·먹거리 농어촌 기본소득
35	식량·농업안보와 농수축산물 수입 문제
36	공정가격 보장(양곡관리법 제정 등)
37	지역(농어촌) 소멸 위기극복
38	토양건강개선(유기농, 작물순환, 휴지기)
39	보건·의료·안전 공공의료 확충·지역격차 해소
40	건강보험 강화·무상의료 확대
41	사회적 재난 국가책임제
42	안전교육의 필수화
43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
44	혐오·차별·성평등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및 혐오금지 제도
45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 보장
46	성범죄 처벌(딥페이크 포함)
47	낙태권
48	문화다양성 존중과 보호
49	저출생·고령화·가족 청년·신혼부부 지원(주거·출생·육아)
50	비혼(출산)·동거·입양 등 다양한 가족모델 수용 및 보호 제도
51	국가 돌봄·복지 강화
52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화
53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54	연금개혁
55	사실혼 제도
56	교육 입시제도 개혁
57	교권과 학생인권
58	대학개혁(무상교육과 대학경쟁력, 인문학과 기초학문 육성)
59	역사교과서·역사교육
60	기본 교육내용 개혁(노동·인권·생태·성평등·민주시민교육)
61	창의력·비판적 사고·협업 중심 교육혁신
6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63	과학·기술·학문 R&D 정책 혁신
64	반도체 정책 혁신
65	AI 산업 육성, 규제, 윤리교육
66	내실있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
67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규제
68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학문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

□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 26개 분야를 선정.

1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언론개혁
2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검찰 및 사법부 개혁
3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4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5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6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	민주유공자법 제정
7	경제개혁·민생·부동산	주거안정(부동산, 공공주택 등)
8	경제개혁·민생·부동산	경제민주화(재벌개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정거래 외)
9	외교·안보·평화	균형외교(미중경쟁 스텐스, 중견국 외교)
10	외교·안보·평화	남북협력(기후·환경·전염병 외)
11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공투자·개발, 계통연계 확충, 에너지펀드, RE100산단 등)
12	기후·환경	탄소중립정책
13	노동·일자리	비정규직 보호·동일노동·동일임금
14	농업·먹거리	지역(농어촌) 소멸 위기극복
15	보건·의료·안전	공공의료 확충·지역격차 해소
16	보건·의료·안전	사회적 재난 국가책임제
17	혐오·차별·성평등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및 혐오금지 제도
18	혐오·차별·성평등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 보장
19	혐오·차별·성평등	성범죄 처벌(딥페이크 포함)
20	저출생·고령화·가족	국가 돌봄·복지 강화
21	저출생·고령화·가족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화
22	교육	입시제도 개혁
23	교육	역사교과서·역사교육
24	교육	기본 교육내용 개혁(노동·인권·생태·성평등·민주시민교육)
25	교육	창의력·비판적 사고·협업 중심 교육혁신
26	과학·기술·학문	R&D 정책 혁신

2.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2차 설문조사 분석

- 기간: 2025년 2월 6일~2월 20일(2월 15일 1차 마감, 20일 최종 마감)
-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온라인 모집(2월 23일 온라인 토론회 참가자 모집)
- 주관: 전국비상시국회의
- 참가: 179명

□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2차 설문조사 분석

-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6개 사회대개혁 세부주제에 대해 우선순위 3대 분야를 선정

하고자 진행한 2차 설문조사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해 도출된 상위 10대 주제는 다음과 같이 △ 검찰 및 사법부 개혁, △ 언론 개혁, △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 남북협력(기후·환경·전염병 등) 등이 선정되었음.

	주제	빈도
1	검찰 및 사법부 개혁	120
2	언론 개혁	95
3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73
3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73
5	남북협력(기후·환경·전염병 등)	68
6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61
7	경제민주화(재벌개혁·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정거래 외)	53
8	균형외교(미중경쟁 스텐스, 종건국 외교)	39
9	주거안정(부동산, 공공주택 등)	34
10	역사교과서·역사교육	30

○ 차별 및 혐오 금지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11대 토론 주제를 선정하였음.

1. 검찰 및 사법부 개혁
2. 언론 개혁
3. 남북협력(한반도평화, 균형외교)
4.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5.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 돌봄, 교통, 환경 등)
6.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7.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비정규직 보호, 주거안정 등)
8. 교육개혁(노동, 인권, 생태, 성평등, 민주시민, 인성교육, 입시제도개혁, 창의력 교육혁신 등)
9. 역사정의(과거사 청산, 역사교과서, 민주유공자법 등)
10. 기후 환경(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펀드 등)
11. 사회적 불평등 해소(차별, 혐오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부록4: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결과]

□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일정

- 일시 : 2025년 2월 23일(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온라인 줌(Zoom, 진행 본부 : 전국비상시국회의 사무실)
- 참여 : 전국 각 지역 및 각 사회 부문에서 107명 참석(15개조 분임토의)

□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결과

- 각 과제별로 15개 시민 토론 모임에서 논의된 구체적 정책과제

① 검찰 및 사법부 개혁

- 검찰을 기소청과 분리해주고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 시민 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언론 개혁

- 강력한 징벌적 손해보상법 제정 법 필요
-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경영진 임명 시 시민단체의 검증이 필요

③ 남북협력(한반도평화, 균형외교)

- 대북 적대정책(대규모 한미군사연습, 대북비라, 드론 침투, 대북 경제제재 등) 중단
- (남북간 교류 협력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

④ 참여·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 시민의회를 설치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강화
- 주민자치회 법제화

⑤ 기본권 보장, 국가책임(의료, 돌봄, 교통, 환경 등)

-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가통합 교육운영체계 확보
-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환자 모든 의료비(간병·돌봄 포함) 해결하는 보험일원화 정책

⑥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 제7조 우선 폐지

⑦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비정규직 보호, 주거안정 등)

-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보장
-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⑧ 교육개혁(노동, 인권, 생태, 성평등, 민주시민, 인성교육, 입시제도개혁, 창의력 교육혁신 등)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민주시민교육교육원 등을 제도화

- 입시제도 개혁, 수능시험제도 폐지
- ⑨ 역사정의(과거사 청산, 역사교과서, 민주유공자법 등)
 - 역사정의 관련 사회적 거버넌스 필요(거대담론 형성을 위한 정부, 정당, 시민사회 하나의 네트워크 필요)
 - 역사교과서 개정을 통한 일제잔재 청산 역사교육
- ⑩ 기후 환경(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펀드 등)
 -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 지역 한전을 만들어서, 지역적 생산 전력은 그 지역에서 1차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 ⑪ 사회적 불평등 해소(차별, 혐오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 차별(교육기회의 제공, 사회에 대한 접근) 극복 방안 연구 필요
- * (별도모둠) 통합주제
 -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 참여·숙의(정당) 민주주의 혁신 방안 법제화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